



2026 INSS
PEACE FORUM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 및 평화관리 방안 모색

26. 6. 29 | 웨스틴 조선 서울 오키드룸(2F)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6 INSS
PEACE FORUM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 및 평화관리 방안 모색

26. 6. 29 | 웨스틴 조선 서울 오키드룸(2F)

INSS
유튜브 중계



시 간	세부 내용
13:30 - 14:00	개회식 ●개 회 사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기조연설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
14:00 - 15:30	1세션 연쇄 정상외교에 따른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 : 한반도 주변국의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 ●사 회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발 표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문제연구실장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하상응 서강대학교 교수 조진구 경남대학교 교수 * 1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토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5:30 - 15:50	Coffee Break
15:50 - 17:30	2세션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현실적 과제(주변 4강 외교) : 한반도 평화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주변국과 협력방안 모색 ●사 회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발 표 조용근 경남대학교 교수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 ●토 론 이근욱 서강대학교 교수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前 수석연구위원

1세션 라운드테이블

연쇄 정상외교에 따른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 : 한반도 주변국의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

11

사회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발표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문제연구실장	13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9
하상응 서강대학교 교수	27
조진구 경남대학교 교수	35

2세션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현실적 과제(주변 4강 외교) : 한반도 평화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주변국과 협력방안 모색

47

사회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발표

조용근 경남대학교 교수	49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	57

토론

이근욱 서강대학교 교수	63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前 수석연구위원	65

개 회 사



김 성 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성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하는 올해 두 번째 피스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피스 포럼의 주제는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 및 평화관리 방안 모색」입니다. 주제가 시사하듯이 올해 하반기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정상회담, 중러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연쇄 정상 외교의 결과가 하반기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관계의 향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추이, 중동 정세의 변화, 그리고 북중·북러관계의 전개 양상은 모두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히 변화하는 환경을 관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선택지를 찾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적대적 2국가론이 지속되고 있으며, 남북 간 군사적 신뢰는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위기를 예방하고, 긴장을 관리하며,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연쇄 정상외교에 따른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을 주제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주요국 정상외교를 평가하고, 그것이 향후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현실적 과제(주변 4강 외교)」를 주제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적 과제들을 점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북간 군사위협을 감축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함께, 향후 군비통제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 접근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핵화는 장기적이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중단(동결)-감축-비핵화라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 유럽 순방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군비통제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가장 유력한 해법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단계인 중단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추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위기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호 신뢰 구축과 후속 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적 협상 시작 자체도 쉽지 않으며 중단 자체의 장벽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간 신뢰의 증진이 필요하며 다른 의제에 앞서 관계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보다 평화체제 구축이 선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단기적 과제와 함께, 장기적으로 군비 통제와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단순한 학술적 토론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제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지혜로운 대응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 조 연 설



방 용 승

민주평통 사무처장

2026년 PEACE FORUM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에 열린 ‘PEACE FORUM’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매 분기 PEACE FORUM을 개최해 전략적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연구하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들과 이 자리에 소중한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면의 국제정세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미국과 러시아(구 소련)가 세운 전후 질서를 그들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형국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한 전쟁 발생에서 나타났듯이 러시아는 국제적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면서 군사력을 동원해 자신의 국익을 관철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식량 및 에너지 공급망에 큰 차질을 가져와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침체시키는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직·간접적인 무기 지원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해 왔으며, 이에 더해 북한은 러시아 파병까지 진행하였기 때문에 최근 한-EU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듯이 EU 다수 국가들의 대북 적대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 다수의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격변기 불확실성을 증대시켜서 향후 정세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탈냉전 이후 조성된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체제가 쇠퇴하고 다극화로 나아가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공격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의 투자와 교역이 증가하는 서반구를 최우선 관리지역으로 명확히 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AI 기반 경제의 주도력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을 회복하려합니다. 그러나 그린란드 인수 시사 등으로 동맹 관계가 악화되면서 최근 5월 유럽에서 10명 중 1명 만이 미국을 동맹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김해 미중 정상회담처럼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AI 기반 인프라 구축의 핵심 요소인 희토류를 중국에서 확보하고, 중국은 관세 인하를 얻어내는 등 무역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군사력을 동원한 패권유지 전략으로 세계적 복합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의 핵개발을 명분으로 진행된 이스라엘·미국의 對이란 공습과 9월 스냅백 조항에 따른 UN의 對이란 제재 부활에 따라서 이란에서 고물가의 경제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대중 시위와 탄압의 악순환으로 이란의 신정체제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2월 이란 핵개발 저지를 이유로 다시 미국·이스라엘의 對이란 공습이 재개되자 이란이 중동 전역으로 반격을 진행하면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증폭되었습니다. 전쟁이 확산되면서 고유가의 석유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었고, 이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이어져 글로벌 복합위기로 악화되었습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지닌 한국 사회는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군사력 위주 해결 방식에 따른 전쟁의 기운이 동북아와 한반도로 번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올해 1월 북경 한중정상회담에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 사업, △원산갈마 평화관광,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개발계획 등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5월 북경 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두만강 출해에 대해서 북중러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발표와 부합하였습니다. 6월 평양 북중 정상회담에서 두만강 개발이 구체적인 성명이나 북측 기사로 외화되지 않았지만, 경제 및 사회문화협력에 이례적으로 군사협력까지 합의한 북중 협작의 흐름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한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에 두만강 개발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협력 차원의 두만강 개발은 동북 3성 물자의 ‘동해 출해’만이 아니라, 향후 북극항로 개발과 시베리아, 알래스카까지 포괄하는 북극권 에너지 개발의 거점 조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참여 논의를 불러오고 서로 국익을 도모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실현시키는 계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정상회담이 분주히 전개되는 현실에서 평화공존을 통한 한반도 위기관리 및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진실에 대한 파악은 낯은 이념과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에 대한 검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미중, 중러, 북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며 새로운 질서에 대한 밀고 밀리는 수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를 대신할 동북아의 새판을 짜기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하지만, 틈새를 잘 포착하고 활용하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일을 강조하면 할수록 분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요하면 할수록 북한의 핵무기는 고도화되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에 대해 1994년 핵동결을 가져온 북미 제네바 합의, 2000년 북미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지를 합의한 북미코뮈니케 발표, 2012년 농축우라늄 동결을 성사시킨 2.29 합의, 2019년 ‘노딜’로 실패했지만 농축우라늄 시설 폐기까지 논의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과 미국의 협상 역사를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란은 미국과 종전, 핵무기 개발 및 보유 포기, 고농축우라늄 희석 등을 합의하고 동결된 이란 자금 해제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가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면서 농축우라늄 시설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군사 주권 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논의 자체를 협상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는 점을 살펴볼 때 역사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내용보다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 내용이 파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법은 없지만 처음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제대로

추진했다더라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정례적으로 발간하는 『2026년 연감』에서 언급한 약 60기의 북한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때때로 포괄적 성격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주장하면서 어렵게 단계적으로 추진 해나가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 및 진행 과정을 무산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미국·이스라엘-이란 중동 전쟁 등 전쟁이 크게 증가하는 최근 격변의 세계 정세와 맞물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환경을 조성하여 북한의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해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로 평화공존의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설정하고,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과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추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실현하는 당면의 과제로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과 더불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의 접경지역 국경선화 작업에 대한 충돌방지책으로도 실효성 있게 작용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방북하여 북한의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한 싱가포르 발라 크리쉬난 외무장관이 제안한 7월 ARF에 대한 최섉희 외무상 초청 성사, 그리고 9월로 예정된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과정을 통해 그 성과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경청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적 건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들도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민주평통 상임위원, 강연자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협업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세션 (라운드테이블)

연쇄 정상외교에 따른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 : 한반도 주변국의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

연쇄 정상외교에 따른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문제연구실장

1. 2026년 5~6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연쇄 정상회담의 의미

○ 2026년 5월 14~15일 미중 정상회담

- 미중 간 구조적 경쟁 관계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치명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의 재정비에 주력한 위험 관리형 회담
-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새로운 양자 관계 담론의 등장과 미중 간 ‘관리된 경쟁’ 국면의 진입 가능성 제고
- 미중은 여러 양자 현안과 중동 전쟁 등 복잡한 국제 문제 협의 중 한반도 문제를 별도로 논의
- 회담 후 미 측은 (백악관 팩트시트 등에서) 트럼프-시진핑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명시
- 정상회담 4월 10일 왕이의 방북과 김정은 면담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전 북한과 동 사안에 대해 일정한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

○ 2026년 5월 20일 중러 정상회담

- 중러 「선린·우호·협력 조약」 25주년과 5년 연장 합의를 계기로 다극적 세계를 향한 양국의 전략적 연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적 무대
- 중러는 서로를 “전략적 버팀목”으로 규정하고,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과 연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 화려한 외교적 수사의 이면에 자리 잡은 ‘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 타결 불발은 양자 관계의 또 다른 냉혹한 현실을 방증
- 동북아·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비판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과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필요성 △북중러 3자 경제 협력과 두만강 출해권 조율 문제를 논의

- 2026년 6월 8~9일 북중 정상회담
 - 정상회담 직전 △김정은의 신규 핵물질 생산 시설 현지 지도(6.3) △김정은의 신형 구축함 강건호 항해시험 참관(6.4) △김정은의 탄도 미사일 생산 공장 방문(6.6) △김여정의 비핵화 거부 담화 발표(6.7)
 - 북중 양국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넘어 새로운 전략적 협력 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사회주의 연대 속 상대방의 핵심이익과 정치적 노선에 대한 상호 존중 의지 피력
 - ※ 중국은 북한을 지역 정세를 함께 관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
 - 정상회담 공동 발표와 관련 보도에서 북한 핵문제나 비핵화에 관한 언급 전무
 - 그러나 시진핑-김정은이 동 사안을 완전히 배제한 채 양자 간 경제·군사(군대)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종의 공감에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
- △중국의 ‘안정적’ 미중 전략경쟁 관리 구상 △중러 간 북한(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선권 및 공조 협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 재평가와 지역 정세 관리 의도 등에 주목

2. 하반기 한반도 안보 환경 전망: 러시아 요소를 중심으로

□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 북러 밀착의 제도화와 ‘전략적 동맹’ 성격 강조
 -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후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 간의 모스크바·원산 간 연쇄 회담(2025년 7월, 10월 등)을 통해 양국 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임을 대외에 명시
 - 과거의 단순한 친선 관계를 넘어 정치·경제·안보는 물론, 물류·인프라 체계 구축과 여행 규제 완화 등 접경 지역 협력을 아우르는 다층적 동맹의 제도화를 전면에 표명
-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일에 전가
 -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비판과 대응 행동을 전면 중단했고,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돌리는 논리를 정교화
 - 러시아는 한미일 3국의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한반도 전개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 구조를 파괴하는 공격적 진영 구축 행위”로 규정

- 반면, 북한의 군사적 조치는 이러한 서방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주권 방어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일관되게 옹호
- 기존 UN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러시아는 과거 자신들이 동의·참여했던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
 - 러시아는 미/서방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과 제재가 “해결책이 아닌 교착 상태만 부추기는 도구”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감시 메커니즘에 반대
 -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특히 「신조약」 체결 이후 합법적인 양자 프레임워크 내에서 북한과의 경제적·물리적 협력을 전개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러관계 개선 기대
 -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는 한러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
 - 대체로 대러 제재 완화·해제 등 한국 정부의 반러 정책 참여 중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행보를 지켜본 후 이에 상응하여 향후 대한 노선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
 - 다만 푸틴이 올해 초 이석배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별도의 전제 조건 없이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과거의 실용적 협력을 언급하며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프로세스의 재개와 미러 간 거래적 데탕트 가능성

- 미국의 이란 종전 MOU 합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의 시선 이동
 - 트럼프는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프로세스에 돌입했으나 당사국 및 유관국 사이의 첨예한 이해관계 상충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성과 도출에 실패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축소됐으나, 동 전쟁의 출구 모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프로세스의 재개에 대한 기대 증대
 - 트럼프는 미-이 간 종전 MOU 조율·발표에 즈음한 6월 14일 푸틴과 9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며 강력한 종전 중재 의사를 피력
 - ※ 트럼프는 이에 앞선 6월 13일 트루스소셜에 아무런 설명 없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걷던 사진 한 장을 게시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은 여전히 쉽게 예단키 어려운 난제
 - 현재 전쟁은 대규모 영토 변화가 정체된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양측은 상대방의 전쟁 지속 의지를 꺾기 위한 병참선과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원격 타격전을 지속
 - 러시아 군 지휘부는 푸틴과의 군 지휘관 특별 정례회의 등을 통해 2026년 말까지 돈바스 전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작전 목표로 보고
 - 우크라이나도 군사적으로 러시아 내부의 인프라와 보급망을 파괴하는 비대칭 전술을 구사하고, 외교적으로 서방과의 연대를 통해 대러 금융·경제 제재 및 선전전을 강화
 - ※ 두 당사국 모두 전쟁 종식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며, 트럼프의 압박 재개 가능성을 고려해 협상력 제고에 주력
 - 종전 기회요인: △트럼프의 중재 드라이브 △러시아의 전쟁 피로감 누적 △우크라이나 현실 수용 가능성 / 제약요인: △영토 문제에 대한 동상이몽 △전후 안보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
- “앵커리지 합의”와 미래 간 거래적 데탕트 가능성
 - 미국 「NSS」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미국의 ‘적’ 또는 ‘위협’이 더는 아닌 유럽 지역에 국한한 위협일 뿐이며, 국제체제로부터의 완전히 배제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관여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안정을 추구한다는 입장
 - 러시아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다극 질서 구축과 전후 국제무대 복귀의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양자 협의 과정에서 미래 간 경제 협력에 관한 논의가 병행되고 있는데 총 14조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공동 사업 계획, 이른바 ‘드미트리예프 패키지’가 논의되고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
 -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중재를 통해 종식될 경우,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서 ‘거래적 데탕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암시

□ 러시아의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 아키텍처’ 구상과 대북 군사 협력

- 구상의 발전 맥락
 - 푸틴은 2024년 2월 크렘린궁에서 열린 연례 연방의회 국정연설에서 “가까운 미래에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분할 불가능한 안보의 윤곽을 형성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관련 화두를 던짐
 - 푸틴은 2024년 6월 외무부 간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를 ‘구상(Initiative)’로 격상해 발표했고, △유럽-대서양 모델의 붕괴 △유라시아 대륙 내 역외 세력(미국)의 군사적 주둔 청산 △참여 개방성을 세부 원칙으로 제시

- 이후 러시아는 가장 가까운 우방인 벨라루스와 함께 ‘민스크 유라시아 안보회의’를 통해 동 구상의 실현을 추구하며, 북한, 이란, 미얀마와 함께 ‘21세기 다양성과 다극화를 위한 유라시아 현장’ 초안 작업에 착수
- 북한의 적극적 참여
 - 북한은 2025년 10월 28일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제3회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최선희 외무상을 수반으로 하는 대표단을 최초로 파견
 - 최선희는 본회의 연설에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과 나토의 동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서부(우크라이나 전선)의 안보 위기 책임을 미국에 전가
 - ※ 당시 최선희는 “북한은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극화된 신세계 질서 건설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천명
 - 2026년 2월 3일 위 5개국은 “21세기 다양성 및 다극성 유라시아 현장을 향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현장 초안의 실질적·절차적 사안을 조율하기 위한 포괄적 협의 프로세스를 공식 개시
- 2026년 4월 러시아 고위급 대거 방북과 북러 군사협력 5개년 계획 체결 시사
 - 쿠르스크 해방작전 1주년을 맞아 평양에 건설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개최를 계기로 벨로우소프/볼로딘 등 러시아 고위급이 대거 방북해 김정은을 접견
 - 이 자리에서 러시아 측은 “「2027~2031년 기간의 북러 군사협력 5개년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식 선언
 - ※ 러시아 측과 달리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정치군사적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었다”라고 모호하게 보도
 -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대체로 △상호 군사 공급망의 제도화 △부대 간 정례 소통과 연합훈련 실시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전망

□ 한반도 안보 환경 관련 주목 사항

- 국제질서의 재편 특성과 경향
 - 미중 전략경쟁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진영 구도는 약화
 - 미국의 국제적 권위와 지도력의 현격한 약화
 - 미국의 동맹 정책 전환에 따른 서방 세계의 분열 가시화
 - 미중 간 ‘관리된 경쟁’, 미러 간 ‘거래적 데탕트’ 흐름 감지

※ 과거보다 느슨하고 비정형의 상호 세력권을 인정함으로써 직접적 충돌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안정(세력균형)과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신 강대국 협조체제’의 등장 가능성

○ 중러의 국제질서 다극화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접근

- 현 트럼프 집권기의 효과적 활용 필요성
- 북한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와 적극적 활용 모색
- 한반도 내 긴장 고조와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부담
- 북한 체제 지속 추구 하 비핵화 담론의 불거론(폐기가 아닌 장기 과제화)
-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북미(남북?) 대화 동시 지원 가능성

○ 러시아 행태의 양면성

- 러시아의 ‘신 유라시아 안보체제’ 구상의 의미와 한계
 - ※ 동 구상은 양자/다자 군사동맹이나 경제협력체가 아닌 유라시아 내 폭넓은 反/非 서방 다자간 안보·경제 규범을 지향
 - ※ △구 소련권 중심의 CSTO, EAEU △상이한 이해관계의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SCO와 대비
- 2024년 북러 「신조약」은 러시아의 기존 동맹 정책에 배치되는 결정으로 북한의 전략적 기동에 따른 예외적 결과
- 러시아에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자 ‘부담’(연루와 방기 동시 위험)
- 현재 러시아의 대북 보상은 ‘수사’와 ‘생색’에 집중
- 남북한 등거리 정책의 실효성과 한러 간 경제협력 필요성 유지

○ 향후 전망과 과제

- 미 트럼프 정부의 △우크라이나 △한반도로의 정책 관심 이동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 북한의 대러 단기적 군사 수요 축소
-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관계 안정적 관리 노선 활용 필요
- ‘신 강대국 협조체제’의 등장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재편 흐름 객관적 분석
-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환경 조성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중러 활용
- 북중러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 발신과 정책 집행

연쇄 정상회담에 따른 하반기 안보 환경전망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연쇄 정상회담의 몇 장면

1. 미중정상회담

□ 전반적 평가

- 2025년 11월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의 연장
 - 휴전(Trump's China Trade Truce): (美)관세와 (中)희토류 수출통제 사이의 균형
 - 미국 독점의 “무기화된 상호의존(weaponized interdependence)체제” 해체
- 2026년 미중 정상회담: 대만 사수 vs 무역 사수
 - 5B (Boeing, Beef, Bean, Board of Investment, Board of Trade) vs. 3T (Taiwan, Tariff, Technology)
 - 중국의 맞춤형 대응을 통한 관리된 경쟁(managed rivalry)
 - ‘관세 vs. 희토류 수출통제’에 이어 ‘석유(베네수엘라, 이란) vs. 희토류 수출통제’의 길항
- 미·중 관계의 기본값(default)이 변하면서 미·중 관계 성격 변화
 - (美)‘전략경쟁’ → (中)‘건설적 전략안정관계’ → (美) 부분적 수용 (with fairness and reciprocity)

□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평가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 차이
 - 美: “미중 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Fact sheet)

- 中: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외교부 대변인)라는 것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이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의미임.

○ 북미 관계 변화

- 5월 미중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회담 (예정대로) 무산된 이후 9월 시진핑 주석 방미,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까지 **유동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화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는 아님. 향후 트럼프가 이란 종전의 성과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북핵 성과로 연결하려는 유인은 있을 것임.
- 싱가포르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외교장관 방북 직후 인터뷰 (“현시점에서 미국, 한국, 일본과 중요한 의사소통의 루트를 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Strait Times*); 왕이 외교부장 (김정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마주 앉지 못할 이유가 없다.”)

○ 중국 역할론

-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과 달리) “이란, 우크라이나, 대만, **한반도** 등 주요 국제, 지역문제를 논의했다”라고 선제적으로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가 부각되지 않으면 북미관계에 선행해 자국의 건설적 역할론을 수행할 동력(한중관계 발전)은 없음.
-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미대화를 지지하고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미대화 국면에서 China Passing을 방지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함. 선제적 북중 정상회담 개최도 이러한 측면이 있음.(CSIS)

2. 중러 정상회담(‘26.5.8)

□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 미중 정상회담 직후 (예정된) 중러 정상회담

- 〈 전면적 동반자관계 및 전략적 협력(協作)의 지속적인 강화와 선린·우호·협력 관계 심화에 관한 중러 공동성명〉과 〈다극적 세계와 신형 국제관계 형성에 관한 중러공동 선언문〉 채택.
- ‘등을 맞댄(背靠背)’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약 40차례의 중러 정상회담 개최.

- 러-우 전쟁 등 요인으로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러시아를 대미 전략의 후방으로 인식하는 등 일시적으로 비대칭적 동맹의 성격이 나타남.

○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 △정치외교 관계 심화 △경제산업 협력 확대 △안보 및 군사적 공동 대응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동 입장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주요 의제를 포괄함
-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와 유엔 헌장에 기반하는 국제관계 기본 규범의 수호 강조(5항),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 협력 강화와 외연 확대 합의(6항), 공정하고 합리적 국제 경제 질서 구축과 세계 다자무역 체제(7항) 구축을 통해 중러가 **다극화 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에 대한 관심**을 기울임.
- 나토(NATO) 동진과 아태지역 연대 확장, 아태지역 다자 군사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확대 등 비판하며 다자간 안보 협의체제 구축 필요성에 기반해 **새로운 공동-다자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 구상을 제시함**(9항)

□ 중러의 지역질서 인식

○ 한반도 문제

- 무력이나 제재가 아닌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포괄적 해결 방안을 지지함. 대북 제재 및 압박정책, 역내 군사블록 추진 등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극동 연해주, 북한 간 경제 협력 확대 합의함**.(10항)

○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문제

- 〈광역 두만강 이니셔티브〉의 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광역두만강 이니셔티브〉 구성 국가의 무역투자, 교통, 에너지, 디지털 경제, 농업, 여행과 환경 등의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지역협력을 추동한다**”(2026년 공동성명)
- 2025년 중국은 GTI 의장국을 맡아 동북아 지역협력을 지지하고 두만강 구성국가의 교통, 에너지, 무역투자, 디지털경제, 농업, 여행과 환경 등의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GTI를 독립적인 국제조직 전환을 검토한다**“ (2025년 공동성명)
- 중국은 동해를 통해 원해 활동, 해양조사, 러시아 극동-북한 항만연결, 북중러 접경 물류망, 북극항로 구축과 연계하는 한편,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확보해 대일, 대미 견제를 돌파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음. **이런 점에서 국제조직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음.**

3. 북중정상회담

□ 북중 협력의 고도화

○ 북중관계의 전략적 협작(協作)

- 중국외교에서 ‘협력(cooperation)’의 번역어는 ‘합작(合作)’과 ‘협작(協作)’임. ‘합작’은 목표가 일치하지 않아도 공동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면, ‘협작’은 동일한 목표 속에서 공동의 결과를 만드는 것.
- 그동안 유일하게 중러 간 전략적 협작관계를 구축했으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중관계에도 ‘전략적 협작관계’를 사용하는 등 대등한 양자관계를 추진함.

○ 북한식 “실용외교” 전개

- 김정은 체제의 자신감이 고양되고 북한이 동북아 지정학적 판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올라타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고자 함.
- 김정은 체제 경제적 업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지방 발전 20*10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의 유입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산업연관 효과로 묶인 북중 경험과 중국의 대북 투자 확대가 필요함.

○ 협력의 내용: (北)“북중관계는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사업”

- 전략적 소통의 강화: 외교, 법집행(치안),¹⁾ 군사 교류²⁾ 등 안보와 치안 분야의 교류도 강화하기로 함
- 경제 협력: 중국의 투자, 소재와 부품 등의 공급이 절실함. 이를 위해 중국은 건설, 과학기술, 의료 보건 분야의 협력을 제안함.
- 인적 교류 등 활성화: 향후 관광교류, 학술교류 (9월 말 김일성대 설립 80주년) 활성화할 가능성

□ 북핵과 제재문제 해법

○ 북한 비핵화 문제

-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de facto) 인정한 것은 아님.** 이와는 달리 북핵문제

1) 1,420km에 달하는 국경지대 불법 월경을 단속하는 것, 사이버 범죄 대응과 무관하지 않음.

2) 비동맹 속에서 지역 충돌을 억제하고자 하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군사 교류, 협력도 생각할 수 있음.

논의를 위해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서면, 중국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으면서 한반도 분쟁을 방지하고 북핵 관리에 협력하겠다는 의미가 강함.

- 중국이 비핵화 목표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기보다, 북중관계 및 대화 재개 환경을 고려해 **비핵화 언급을 전술적으로 자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유엔안보리 제재문제

-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한 것은 아님. 그동안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외부 자원의 유입이 절실했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
- 이 과정에서 사실상 독자 제재를 하는 중국을 문제 삼고 있으나, 중국은 제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미중관계의 전선 확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제재의 기본 틀은 유지해** 옴.

○ 새로운 협력

-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국경무역 확대, 대북 투자 여건 개선, 북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재 조달, 관광 활성화를 통해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우회로를 더 열**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중국의 출해향과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과 같은 이익균형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음

중국의 북핵관련 입장 및 향후 예상행보

□ 한반도 비핵화 입장과 전망

- 기존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 대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정치적 해결(political settlement)”을 예의 강조할 것으로 보임³⁾

3)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중국은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자제하고 있음. 2025년 12월, 20년 만에 『신시대의 중국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백서를 발표함. 2005년에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언급했으나, 이번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빠짐.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핵국가 선언 등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유동적 환경을 반영함.

- 정치적 해결론은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전략적 침묵, 전략적 인내가 북핵 상황을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고 미국 책임론을 강조하는 일종의 blame game임.
- 중국은 최근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용어 사용을 극히 자제해 왔고 이번 북중정상 회담에서도 예상대로 일체의 언급이 없었음. 다만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로드맵 (동결-감축-장기적 비핵화)은 한국적 방안과 대체로 일치함
- 중국은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 유럽 등 국제사회의 시선, NPT 체제 유지,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 등을 고려해 북핵 보유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제재를 통해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할 수는 있겠으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북중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어 북핵문제 해법의 변화가 나타날 때를 대비하고 있음.

□ 정책적 함의

- 단극 질서 속에서 미국(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었고, 북핵문제의 기본값이 변함. 특히 북핵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범(NPT)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확인한 상황에서 미중 또는 미러 경쟁의 하위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트럼프의 의지와 선호(북한체제 전환, 인권, 워비어 사건 등의 주변화, 일부 북한의 안보 우려 인정)에 따라 북미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음.
-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한 상황에서 비핵화 입구, 출구 모두 현실적 한계에 직면함. 이런 점에서 북미대화를 통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 새로운 논의의 물꼬를 트고 종전, 평화공존에 합의할 필요가 있음. 다만 미중이 한반도 이슈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의 정교한 정책 투입 → 미중의 Feedback → 미중관계의 의제화’ 로드맵 필요함
- ‘비핵화-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한반도 핵 질서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함. 실제로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 그리고 한국의 대북한 억지의 강화는 남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음. 적어도 북의 핵보유 지위를 NPT 일원으로 인정(recognition)할 수 없으나, 북의 핵무장력 현실을 인지(awareness)하는 수준에서 중단과 동결, 축소(사실상 군축), 핵 없는 한반도 논의 불가피함.

-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선제적으로 포기할 필요가 없으나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군축 협상이 열린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평화선언, 종전선언, (종전을 전제한) 평화체제 논의는 '위협감소'와 '신뢰구축'이 필요함. 특히 평화협정 논의 시 현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딜레마(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할 수록 한반도 비핵화가 멀어지는 현상)'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핵 없는 한반도'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비핵화 메시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국제적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서 국제사회가 가치와 이익을 새롭게 섞는 탄력성(원래 가치와 이익은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국은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로의존적 접근이 나타남. 한반도 비핵화에 메시지 혼선이 대표적임.

- 북핵문제를 미중의 동의와 협력 속에서 풀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역할론은 물론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중요함. 이를 위한 한중협력의 고도화 방안이 필요함

-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고속철, 보건의료, 관광, GTI) 등을 제기했고 중국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현재 대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음.

- 3월 대만인 출입국 표기문제, 여야의원 대만 방문 시 외교차관 면담, 한-EU 공동성명(※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를 반대한다) 등으로 당분간 소강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가능성 모색

- 2026년 미중 정상회담,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 2027년 싱가포르 ARF 회의, GTI 등 소다자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율할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한반도 주변국의 대한반도 전략 전망:

미국의 경우

하상응

서강대학교 교수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 권위주의, (2) 금권주의, (3) 백인우월주의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민주적 절차(및 국제법)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권위주의 친화적이고, 국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운다는 의미에서 금권주의며, 미국의 정체성을 백인 중심으로 좁게 정의내리고 정책을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백인우월주의임.
- 이러한 정책 기조에 기반하여 외교정책을 바라봐야 함. 대통령의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이 서로 완전히 다른 기조에서 움직인다고는 볼 수 없음.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내정책이 반자유주의(anti-liberalism)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민주주의의 쇠퇴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대외정책에서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재편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 2026년 초 트럼프 행정부는 (1)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 납치/체포, (2) 그린란드 소유권 주장, (3) 이란 시위대를 지지하는 발언 등으로 주요 언론의 관심을 끌었음. 2025년에 시행하거나 발언한 국제정치 관련 사항을 보면 (1) 친이스라엘적 중동 정책(하마스 및 이란), (2)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 (3) 파나마 운하에 대한 관심, (4)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개명한 일 등을 들 수 있음. 이에 더해 최근에는 이란 공습 및 쿠바 압박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엿핏보면) 일탈적인 행보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대전략(혹은 큰 그림)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서는 곤란함. 대전략은 없음. 전술한 권위주의(“내 멋대로 하겠다”), 금권주의(“돈으로 안되는 것은 없다” 혹은 “돈만 밝힌다”), 백인우월주의(“미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에 기반해서 보는 것이 나음.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초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초와 완전히 다름. 바이든의 외교정책 기초는 냉전적 시각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진영과 비민주주의 진영을 나누는 “가치 동맹”의 강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띠었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중국 견제에도 열심이었고, 대러시아 제재에도 신경을 썼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을 보였고, 대만 유사시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여러번에 걸쳐 밝힌 바 있음. (다만 중동정책에 있어서는 친이스라엘적인 면을 보이긴 함. 이것은 미국 국내 정치 동학의 함수이기도 함.)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예상과 달리 냉전적 시각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 “예상과 다르다”는 말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군사안보 분야 엘리트 주도로 진행된 중국 견제 정책에 현재 놀라울 정도로 제동이 걸려있다는 점에 기반한 평가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장이 국방부/국무부 관료들과 조율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2026년 2월 28일 이란 공습 이후 일련의 군 간부 해고 상황이 있음. 이외에도 대통령의 발언을 관련 부처가 확인해 주지 않는 일이 빈번함. 또다른 예로 지난 5월 22일 브런슨 주한미국사령관이 “한국은 아시아의 단점”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이 미국 백악관과의 조율을 거쳐 나온 말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인지를 확인하지 않았음.
- 이러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초는 간단히 말해 “현실주의”, “미국 우선주의” 등으로 묘사됨. 세계 경찰 혹은 민주주의의 기수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 기초가 바뀐다는 이야기임. 따라서 “가치 동맹”의 의미는 퇴색되고, 전세계를 몇 개의 “세력권(spheres of influence)”로 나누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임. 세력권은 크게 보아 (1) 미국이 주도하는 북중남미, (2) 중국의 세력권인 아시아, (3) 러시아의 세력권인 유럽으로 나뉠 수 있음.
- 물론 이렇게 세계를 균등하게 삼분하겠다는 의미는 아님. 강대국의 세력권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도 그 선을 넘는 경우에는 충돌의 가능성을 남겨둔 그림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음. 이러한 모습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다자주의의 모습도 아니고, 권위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대치하고 경쟁하는 소위 “신냉전”의 모습도 아님.
- 이렇게 국제정치 지형이 변화화는 와중에 2025년 12월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ies) 문서를 공개하였음.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1. 고립주의 (혹은 먼로주의):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떠받들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거인) 아틀라스가 아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트럼프식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서반구(The Western Hemisphere)에서 미국의 우위를 통해 국경 안보를 확보하고, 마약 밀매와 불법 이민 방지를 최우선 순위로 지정했음. 해당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고, 필요하면 치명적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2. 이념/가치에 앞선 물질적 이익: 미국은 더 이상 특정가치(민주주의, 자유무역)의 수호자나 전파자가 아니며 양자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정체성을 밝힘. 미국의 대외정책의 본질이 거래이기 때문에 동맹은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인식됨. 과거 수십 년간 미국의 지출(재정적자 및 무역적자)로 인한 불균형을 교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그러나 이런 노선은 국제질서를 만들고 유지해 온 미국의 과거 위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에 세력 확장의 기회를 준다는 비판이 있음.
3. 대중 정책의 방향 전환: 이념과 가치가 우선시 되지 않으니 중국을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볼 이유가 없음. 호혜주의를 우선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무역적자를 바로잡는 정도의 견제만 고려 대상임. 동시에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은 역지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미국이 아시아(대만)에 연루될 이유도 없음. 대만에 대한 방어도 제1도련선(The 1st island chain) 동맹국들이 훨씬 많이 지출하고, 협력할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함. 동맹국의 부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대만을 지키는 보호자는 아니라는 의미로 읽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대중 견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함.
4. 유럽에 대한 비난: 유럽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적 쇠퇴와 문명적 소멸(civilizational erasure)에 직면했다고 경고함. (여기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인우월주의적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남.) 대다수 유럽 국민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열망이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러우전쟁에 대한 유럽 지도자들의 비현실적인 기대 탓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미국은 분쟁 종식에 핵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 영토를 보장한 전쟁 종식 제안을 했으나 유럽이 반대하였음을 비난함. 유럽은 나토(NATO) 유지에 기여하지도 않으면서 그 군사동맹이 절대적이고 영구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음. 유럽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내부(within)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유럽에 대한 안보 우산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유럽은 자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5. 대중동 정책 전환: (이 부분은 좀 모호함.) 중동은 더 이상 전략적으로 미국의 최우선 순위가 아님. 지금까지 중동 지역을 장식했던 에너지 문제와 역내 분쟁이 미국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시설과 능력을 갖추었고, 가자 지구 휴전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핵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임. 지금까지의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 기조에 따르면 더 이상 미국이 이란에 개입할 이유는 없었음. 그런데 이란 신정체제에 저항하는 이란인들을 돕겠다는 명분 혹은 이란 정권 교체를 이유로 이미 군사 개입을 감행했고(2026년 2월 28일),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까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이란 문제를 어떻게 뒷수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임.

- 관련해서 한 가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습에 대한 각계의 반응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전쟁을 종식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공약을 걸고 백악관에 입성했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민주당 진영에서도 일부 공감을 얻을 정도로 반향이 컸던 것임. 전쟁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원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트럼프 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도 함. 그런데 지난 2월 28일 이 공약을 깬음.
-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하던 인플루언서 중에서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나옴(Tucker Carlson, Megyn Kelly, Nick Fuentes 등).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 공습에 반대한 각료들도 있음(J. D. Vance). 그리고 트럼프의 반전 입장을 지지하던 공화당/민주당 정치인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음.
- 흥미로운 점은 유권자 차원에서는 별 변화가 안보인다는 사실임. 트럼프를 지지했던 소위 ‘마가 유권자’도 그의 반전 입장에 대해 우호적이었음. 그런데 트럼프가 그 약속을 깨고 새로운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마가 유권자’의 약 70%는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이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반전 입장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아마도 백인우월주의와 성차별주의) 때문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줌.

6. 시야에서 사라진 북한: NSS에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음.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도 사라진 상황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비핵화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혹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으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또 다른 문서인 NDS(National Defense Strategies)에 북한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비핵화 이야기는 빠진 상태임.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약속은 유지하되 대북 방어에 상당 부분을 한국에 맡기는 형국인 것 같음. 미국은 대만해협 위기 방지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긴 했으나,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 하면서 비용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정리하자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서반구'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우선 지역으로 설정하고, 아시아에서는 동맹국의 책임있는 역할 증대를 전제로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음. 미국 주도의 대중 봉쇄정책은 약화되지만, 동시에 아시아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이중 전략을 피력하고 있음. 특히 대만 유사시 억제력을 위해 방위 투자 확대와 군사 역량 강화를 동맹국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큼. 이 때 한국이 북한을 견제하긴 말건 트럼프에겐 중요하지 않아 보임.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발행한 NSS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발행한 NSS에서 전반적으로 대만을 직접적으로 다룬 내용이 많아졌지만,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가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서반구 중심 신면로주의(돈로주의?)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임. 또한 미국 전통의 핵심 동맹국인 유럽 국가들에 대한 상대적 평가절하가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음. 주목해야 할 사항은 트럼프 2기 NSS에서 대만을 다룬 내용의 분량이 증가하였더라도, 대만에 대한 기존 입장의 변화가 크지 않기에 중국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임.
- 미국이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견제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만으로 중국의 부상을 뚜렷하게 견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처럼 보임.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중국의 적절한 대응이 양국의 전술적 휴전 지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에 펜타닐 관련 관세를 부과하고 대중국 상호관세를 발표하였지만, 중국은 대미 맞불 관세로 강경 기조를 이어감. 미국이 대중국 관세율을 높이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미중 강대강 노선은 APEC을 기점으로 전술적 휴전에 들어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를 찾아볼 수 없음.) 미국이 대중국 펜타닐 관세 인하 및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결정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유예함. (그리고 상호관세는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 판결내림.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 속에서 2026년에도 전술적 휴전의 모멘텀이 지속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미

중 간 전술적 휴전 속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의 우호적 카드를 트럼프에게 제시하면서 트럼프는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또한 중국 역시 미국의 강한 대중 경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간 전술적 휴전은 서로에게 윈윈 게임이 될 확률이 높음.

3.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

- 트럼프의 북미대화 추진 목표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는 북한을 일관되게 “nuclear power”로 호명하고 김정은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발언을 지속해 왔음. 따라서 북한 비핵화는 추진 목표라기보다 암묵적으로 포기된 전제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음.
- 그렇다고 해서 핵군축이 최우선 목표로 보기는 어려움. 트럼프는 핵무기의 위험성 자체는 원칙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인류의 최대 위협을 핵온난화(nuclear warming)로 표현한 바 있음. 그러나 그는 북한의 핵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냄. 나아가 북핵을 잠재적 갈등으로조차 인식하지 않는 듯한 발언 함.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북핵을 위협으로 인지하는 듯하나, 동맹국 한국이 처한 엄중한 안보 상황 자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임. “nuclear power”라는 호명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북핵을 선제적으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트럼프가 북미대화에서 얻고자 하는 핵심은, 실질적 비확산 성과라기보다 김정은과의 만남을 통한 자기 우월성과 나르시시즘의 입증일 가능성이 높음. 이는 두 층위로 나타남. 첫째, 나만이 해낼 수 있는 평화라는 과대자기 나르시시즘과 연계됨. 회담의 성사 자체가 자기 독보성의 입증으로 기능할 수 있음. 둘째, 전임자 대비 우월성의 입증과 인정의 획득임. 오바마와 바이든이 성사시키지 못한 관계를 자신이 이뤄냄으로써 우월성을 과시하고, 김정은의 인정 자체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음.
- 문제는 트럼프가 만남을 제의해도 김정은이 응하지 않는다는 데 있음. 트럼프 역시 북미대화 재개의 관건이 김정은의 선제적 만남 제의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회담을 더 원하는 쪽은 트럼프이며, 이 비대칭은 곧 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은이 만남을 제의한다면, 그 의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이 될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음. 김정은은 이미 여러 차례 비핵화는 없으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경우 대화 재개의 여지가 있음을 밝혀 왔음. 따라서 김정은과의 만남 자체를 통해 개인적 정치적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트럼프는 북한

의 핵군축 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다시 말해 자기 서사적 목표(만남)가 실질적 의제(핵군축)의 수용을 추동하는 구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

- 이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북한 간 대화를 주선한다는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

4. 고려사항

- 전술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1) 권위주의, (2) 금권주의, (3)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인 행보에는,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큰 그림”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내 정치 차원에서의 권위주의적 행보(의회를 우회하고 현행법을 무시한 정책 집행)의 연장선상에서 국제법을 무시하는 일방주의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라는 국가의 안보나 이익보다는 자신의 사익(혹은 주위 사람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역/통상/외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미국의 패권을 서반구(The Western hemisphere)에서 확실히 하고, 상대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은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관계를 끊어내는 일이 공식화된다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고,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음. 현재 그린란드를 둘러싼 잡음은 러시아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작동할 것이고, 이 잡음이 유럽-미국 갈등으로 변진다면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불행하게 될 것임.
- 물론 미국이 중남미 지역에서 우위를 점유하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공을 들여 온 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의 해석도 가능함. 하지만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굳이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할 이유가 없음.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어디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일지도 관심사임. 현재 중남미에서의 미국 패권은 유지, 아시아에서 미국의 부담은 한국/일본/대만으로 넘김, 유럽에서도 미국의 부담은 현저하게 덜어냄,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음. 이는 한 두번 언급되었던, “주한미군 주둔지의 미국 소유”라는 의제로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임.
-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혹은 MAGA 세력) 안에는 대중국 강경파(매파)와 비개입주의파가 나뉘어 있음. 이들 중 누가 우위를 점할 것인지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중국을 신경 쓰기에는 이란 공습의 후유증이 너무 커 보임. 이란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잘 될 것 같지 않음.

연세 정상외교에 따른 하반기 한반도 안보 환경 전망: 일본을 중심으로

조진구

경남대학교 교수

1.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외교 평가

- 국정과제 ‘세계로 향하는 실용 외교’ : ①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② G7+ 외교강국 실현, ③경제외교 역량 강화로 경제안보·통상 위기 극복, ④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 노력 지속 추진
- G7, 유엔총회, APEC, 아세안 정상회의, G20 등 국제회의 참석과 해외 순방 외교로 성과¹⁾
- 현실과 이상 중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되며 조화 필요, 현존한 문제 방치는 무책임, 상황 악화 막기 위해서는 있는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6.8.)에 공감
- 2023년 12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통일 부정 이후 남북 관계 단절 지속(대남 무대응/무시), 비핵화 불가(핵보유국 지위 불변, 비핵화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북러 관계의 긴밀화와 북중 관계 복원, 국익수호 원칙하의 대외활동
- 헌법 개정(영토 규정 신설, 기본 헌법에 있던 북반부와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투쟁 등 삭제, 국기의 비율 개정 등)은 **북한의 사실상 ‘제2의 건국’ 선포**
- 북한의 개정 헌법에 대남 적대적 태도나 서해 분쟁 수역 언급 불포함이 적대적 태도 완화로 보는 **희망적 관측 버리고 현실 직시한 정책 추진**이 중요
- 김정은 국무위원장(당 총비서)은 5월 군 관련 행사/현지 지도, 한국과의 국경 지역의 ‘난공불락의 요새’화가 당의 영토방위정책, “적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 자체가 전쟁 역제의 중요한 고리”, 핵 무력과 상용 무력의 지속적, 가속적 강화 노선 불변 천명

1) 취임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베트남, 벨기에, EU, 이탈리아, 교황청 등을 방문하고 양자 정상회담 개최

-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 완화 가능성 희박, 이를 전제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주변국 동향 반영한 ‘국가안보전략’ 수립 필요: 한미동맹 존중·발전시켜야 하나 전부 아니며, 동북아 복합적인 다자안보체제로 나가야 한다는 대통령 언급의 구체적 정책화

2.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 평가

- 북중은 사회주의와 피로 맺어진 전통적 관계와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기초한 관계 중시
-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의 시진핑 방북에 국방부장 동행, 시진핑 국가주석의 로동신문 기고문(6월 8일)과 정상회담 중국 측 발표에 “외교, 법 집행, 군사 문제 등에서의 교류 확대” 등 **군사 분야 교류와 협력 강화 언급에 주목할 필요**²⁾
- 중국의 대일 공동전선 요구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은 불명확: 시진핑의 로동신문 기고문에서 “군국주의부활을 피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한다고 언급했으나 김정은 위원장 발언 혹은 회담에 관한 북한 측 보도에는 언급 없음.
- 일본 안보 동향에 대한 북한의 강한 관심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호응으로 보기 어려워 향후 주시 필요(일본 안보 문제 관련 노동신문 논평, 참고 자료 1. 참조)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북중의 이몽(異夢): 시진핑 방북 사실 로동신문 보도 다음 날인 6월 7일 ‘핵보유국 지위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는 김여정 부장 담화 게재(북한 비핵화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 아니라는 해석 가능)³⁾, 시진핑 국가주석이 로동신문 기고문에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한 북한의 핵개발 견제라는 중국 입장표명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
- 시진핑 국가주석 기고문과 정상회담 관련 북중 보도에 북한 핵 문제 관련 언급 없어 중국의 북한 핵보유 ‘목인’ 추측 보도와 일본 언론의 우려 제기, 목인 여부는 신중한 판단 필요

2) 일본의 북중관계 전문가 핫타 유키히로(堀田幸裕)는 군사 분야에 관한 새로운 협력 문서 체결 가능성을 지적, 마이니치신문, 2026.6.10. 2면.

3) 김여정은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재확인되었다는 미 국무부 대변인 발언 부정하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다. 외부세력의 희망이나 수사적표현에 따라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단언함.

〈표 1〉 북중 정상회담에 관한 일본 주요 신문 사설

아사히신문(6.10.)	비핵화를 잊었는가
마이니치신문(6.10.)	과시하는 북한 위협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묵인
도쿄신문(6.10.)	북중정상회담 핵의 보유를 묵인하지 말라
일본경제신문(6.10.)	중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라
요미우리신문(6.11.)	북중정상회담 북의 핵개발을 불문에 부치는가
산케이신문(6.12.)	북중정상회담 비핵화 방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의 한일 정상회담과 한일 관계의 잠재적 취약성

- 2025년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단일 국가 정상으로는 일본 총리와 가장 많이 만나고 회담
- 2025년 10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4차례 회담(참고 자료 2. 참조),⁴⁾ 특히 올해 1월과 5월에는 양 정상의 고향인 나라와 안동을 상호 방문
- **일본과의 협력 확대라는 대일 외교 원칙**하 정상 간의 서툰 외교로 구축한 신뢰 바탕으로 경제와 공통의 사회문제 등에 관해 협력하는 큰 틀의 합의 도출 성과
- 이재명 대통령, “일본은 지리적으로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유사한 입장,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하에서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라고 이례적인 언급(일본 신문 서면 인터뷰, 2025.8.23.)
- 2026년 5월 19일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두 정상이 “서틀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언급, ‘전략적’이란 표현이 중요한 의미
-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보수성향의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 인식에 불신감: 2025년 8월 23일 발표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시바 총리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니 다카이치 총리는 미언급**⁵⁾
- 2026년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으로 316석,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36석)를 포함하면 전체 중의원 465석 가운데 75%가 넘는 352석을 획득하는 역사적인 대승, 다카이치 정권을 지탱하는 중추는 보수 색채가 강해 **역사 인식 문제는 한일 관계 악화의 뇌관**

4) 2025년 11월 23일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회담에 대해 한국은 약식회담, 일본에서는 간담이라고 부르며 약 15분간 이뤄짐.

5)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민 방문 시에 발표된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 중의원 선거에서 어느 야당도 예산 수반 법안과 내각불신임안 단독 제출 가능한 최저 의석인 51석 미획득, 거대 여당 전제 최소한의 장치도 기능 부전, 다카이치 총리에 이견(異見) 제시하지 못하는 자민당과 정권(이례적으로 ‘다카이치 독재정권’이란 이례적 표현도 등장)
- 2026년 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국론을 양분하는 듯한 대담한 정책, 개혁에도 과감하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안정도 필요하고 국민의 신임이 필요”하다며 중의원 해산 의사 표명, **국론을 양분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안전보장 정책의 발본적 강화**이며 이것은 **우경화가 아니라 보통의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
- 2026년 1월 일본 방문에 앞서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영토 문제와 경제·문화·사회·민간 교류 분야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투 트랙’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관리할 부분은 관리하고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자”는 메시지를 일본 국민에 전달
- **향후 한일 관계의 잠재적 악화 요인을 관리하는 정상들의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

4. 다카이치 정권의 안전보장 정책

○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 3월 31일 방위성은 유사시 적 기지 공격 가능한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육상자위대 첫 배치: 켄군 기지(구마모토현,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개량형인 ‘25식 지대함 유도탄’ (사정거리 1,000km, 북한 전역과 중국 연안이 사정거리), 후지 기지(시즈오카현, 변칙 궤도를 비행해 요격하기 어려운 ‘25식 고속 활공탄’)
- 3월 27일 방위성은 미국에 파견했던 이지스함 초카이의 토마호크 발사 능력 획득 발표: 미국에서의 시험 발사를 거쳐 실전 배치 예정
-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 등 문서 개정으로 2027년까지 토마호크 최대 400발 구입 결정

○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의 개정(4.21, 각의와 NSC)

- 방위장비품의 수출을 비전투목적으로 제한했던 ‘5유형(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의 폐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용인(분쟁 중인 국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 일본과 방위장비이전협정을 체결한 17개국⁶⁾이 대상,⁶⁾ 무기 수출 전면 허용 방침은 방

6) 17개국: 미국, 영국, 호주, 인도, 필리핀,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스웨덴, 싱가포르, UAE, 몽골, 방글라데시.

위산업의 유지와 강화가 최대 목적, 현재의 헌법 제9조의 제약을 용인하는 정책으로 부터의 변경을 의미, 전후 걸어온 ‘평화 국가’의 이상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

○ 안보 3문서의 개정

-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문서의 개정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4.27., 3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정부 제언, 전문가 회의 건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내 개정 예정
- 6월 4일과 9일 자민당 정부조사회와 총무회에서 결정된 제안에 따르면 방위비는 증액을 결정한 한국이나 NATO의 예를 들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5년 이내에 방위력의 변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
-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판단”이라고 언급, 무인 어셋(asset)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응할 필요성 강조, 비핵 3원칙의 수정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론이나 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원자력 잠수함의 보유 문제에 관해서는 ‘차세대 동력 활용’이라는 표현에 그침
- 6월 17일 일본유신회도 A4 120페이지 분량의 정책 제언을 공표, 핵 공유 문제에 관한 검토 개시, 원자력 잠수함의 보유 등 자민당 제언과 격차가 커 자민당 내에도 부정적 의견

〈표 2〉 자민당 제언의 주요 내용

새로운 전쟁 양상 (AI 등 활용)	- 드론 등의 다양한 무인 어셋을 대량으로 도입 - 저렴한 드론으로 고가의 장비를 공격 - 비대칭전이나 미사일과의 복합 공격도 가능 - AI를 활용한 지휘통제 시스템을 정비 - 무인기의 대량 운용해 분석 능력을 고도화 -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하게 정비
계전(繼戰) 능력 확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4년 이상 경과 - 드론이나 탄약을 대량으로 소비 - 전투의 소모전, 장기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 - 유사시의 긴급한 생산 증대 체제 구축을 포함해 적어도 연(year) 단위의 계전 능력 확보
방위산업의 발본적 강화	- 드론 등 이중 용도 국내 생산 기반 강화 - 정부가 공장 등을 보유하고 생산과 시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시스템도 검토

출처: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26.5.26.

〈표 3〉 일본유신회와 자민당 제언의 주요 내용

	일본유신회	자민당
비핵 3원칙	미국이 저출력 핵무기 탑재 해양 발사형 순항미사일(SLCM-N)의 배치 가능성이 있는 2032년을 염두에 두면서 핵무기 ‘반입’에 대해 ‘현실적 검토’	언급 없음
핵 억제	핵 공유의 제도적 과제, 법적 과제, 운용 구상 등에 대해서 검토 시작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제력을 중심으로 확장억제의 신뢰성 확보
VLS 탑재 잠수함	조기에 원자력 잠수함 도입 (8척 필요, 척당 약 6,400억 엔 시산)	차세대 동력의 활용을 포함하여 보유에 관한 시책을 조속히 검토
방위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기준연도는 2026년도). 동지국의 국제기준 3% 이상을 참고로 중장기적인 방위비의 증액을 목표	GDP 대비 3-3.5%를 내걸고 있는 각국의 움직임을 제시하면서 “자국 방위의 국가의사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출처: 마이니치신문, 2026/6/18.

○ 중일관계

-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미국의 역할 축소와 이에 따른 군사력의 불균형에 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협력 강화에 대한 일본 측의 우려 반영
- 2025년 10월 경주 중일 정상회담에서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이어 11월 국회에서의 대만 유사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급속하게 냉각
- 2026년 판 외교청서 중일관계에 대해 “가장 중요한 2국 간 관계 가운데 하나”라는 기존 표현 대신 “중요한 이웃이며, 여러 우려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계속” 언급
- 특히, 중국에 의한 이중 용도 제품의 대일 수출 규제 강화와 중국군 항공기에 의한 자위대 항공기 레이더 조사 등을 열거하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일방적인 비판과 위압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 견지
- 미국과 필리핀 주최 군사 연습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자 4월 17일 중국군은 주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
- 중국과 일본의 정부 간 대화와 접촉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계속되면 11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희박
- 2016년 이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는 차원에서 일본은 자위대 부대를 남서 제도로 이동 배치, 올해 개정 예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을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다면 중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우려(2022년 12월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

5. 향후의 전망과 과제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의 셔틀 외교로 안정된 한일 관계 유지, 향후 좀 더 민감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일본과 안보 측면에서 어떠한 협력 가능하며,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
- 일본 신문 사설을 통해 한일 외교·국방 장관회의(2+2)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신설 제언

2+2	마이니치신문 사설(2025.6.29.) 일본경제신문(2025.8.25.)
ACSA	요미우리신문 사설(2025.8.24.)

- 지난 4월 8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플레넘 기조연설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ACSA 체결이 긴급한 과제라고 지적, 5월 7일 차관급으로 격상해 처음 열린 한일 안보 정책협의회에서 일본 측이 ACSA 체결을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보도
-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 후 안규백 장관은 ACSA 체결 문제를 논의는 했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
- 6월 8일 취임 1주년 기념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ACSA의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 정서상 이를 받아들이기는 현재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했다고 언급
- 한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와 장관급의 2+2를 비정기적으로 개최,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9개국과 2+2 개최(러시아와는 중단 상태)
-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17개 국가와 ACSA 체결,⁷⁾ 일본은 미국 이외에 호주, 영국, 프랑스, 인도,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와 ACSA 체결, 최근 필리핀, 네덜란드, 뉴질랜드와의 ACSA 승인(6.19. 참의원)
- 한국-미국 ACSA는 조약, 이외는 MOU로 내용 미공개: 일본-호주 ACSA는 공동 훈련, 유엔 PKO, 인도적인 국제 구조 활동, 대규모 재해 대응 활동, 긴급사태 발생 시의 자국민 수송, 일상적인 연락 조정 활동 등 대상으로 무기와 탄약 제외한 물품과 서비스의 상호 제공 규정
- **ACSA는 군사동맹, 자위대의 군대 인정, 군사 대국화 지지와 무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진입 지점은 부적절하며 비현실적**(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진입 목적은?)
- 지난 5월의 안동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처음으로 미언급, (한반도/북한)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사용한다면 ‘북한

7) 미국(1988), 태국(1991), 뉴질랜드(2007), 튀르키예(2008), 필리핀(2009), 이스라엘·호주·캐나다(2010), 인도네시아·싱가포르(2011), 캄보디아·스페인·영국(2012), 몽골(2013), 독일(2016), 베트남(2018), 프랑스(2019). 『2022 국방백서』, 195쪽.

- 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충돌 가능성, 양국 간 긴밀한 협의 필요
- 납치 문제 관련 일본의 역대 총리처럼 다카이치 총리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적극적 의지 보이나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관행, 습성과 결별하겠다는 결심”(김여정 부장 담화, 2026.3.23.) 즉,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와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가능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비현실적, 안보 3 문서 개정 앞두고 9월 유엔총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적극 의지 표명해도 북한 무시 가능성(참고 자료 3. 참조)
- ICBM/SLBM/전략폭격기 등 북한식 핵의 3축 체계 구축은 교섭에 의한 해결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제재 완화/해제, 국교 정상화 등만으로 타결 곤란).
- 일본의 전문가 이즈미 하지메 교수 **9월 하순 유엔총회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뉴욕 방문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東亜』, 2026년 4월호, 70-71쪽):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13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미국과의 평화적 공존 언급⁸⁾, 북한이 거부할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새로운 목표 설정, 그 틀 내에서 ‘전 지구적 핵 폐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맥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되면 ‘핵전쟁의 위험성 감소’에 합의, 이것은 ‘전 지구적 핵 폐기’ 위한 첫발, 미국과의 평화적 공존 관계라는 틀 속에서 북한이 핵 개발 억제, 핵무기 감축은 현실적인 시나리오(참고 자료 3. 참조)
-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위기와 지지율 하락 경향**: 2025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와 2026년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들에 대한 비방·중상 영상 대량 제작 유포로 여론 조작 의혹 제기, 국회 허위 답변은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신뢰 추락 위험, 중의원 선거 관련해 비방·중상 영상 제작은 공직선거법 위반

〈표 4〉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일본경제신문)

	2025				2026			
	10	11	12	1	2	3	4	5
지지(%)	74	75	75	67	69	72	69	66
부지지(%)	19	18	18	26	26	23	26	28

출처: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abinet-approval-rating/>

- 통일지방선거(2027년 봄), 자민당 총재선거(2027년 9월), 2028년 여름 참의원 선거 등 일본 정국 동향 주시하면서 다카이치 정권의 안정 예측 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과 새로운 정치문서 ‘이재명-다카이치 공동선언’(가칭) 추진

8)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잡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동신문, 2025.9.22.

〈참고 자료 1〉 일본 관련 로동신문 기사(2026.1.1.-2026.6.19.)

일시	제목	비고
2026.1.11.	신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2026.3.20.	팽창된 일본의 군수산업이 세계에 진출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2026.3.21.	일본의 《평화리념》은 매장되었다	김수진
2026.3.22.	절대로 책임을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성노예범죄	조선중앙통신
2026.3.23.	안전보장환경타령을 늘어놓는 진의도	리학남
2026.4.1.	일본의 재무장화는 제2의 패망으로 향한 행보이다	리경수
2026.4.4.	우주작전무력의 빠른 확충으로 본 전범국의 위험한 군사적기도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2026.4.16.	중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은정철
2026.4.22.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되는 반중국란동	은정철
2026.4.23.	군국주의망령의 부활을 막는 것은 일본이 지닌 의무라고 강조	중국외교부 대변인 발언
2026.4.24.	새로운 공격수단확보에로 향한 재침세력의 위험한 군사적동향	무기명
	일본의 《신군국주의》 망동을 저지시킬데 대해 강조	중국외교부 대변인 발언
2026.4.29.	일본군국주의부활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중국외교부 대변인 발언
2026.4.30.	나토와 일본은 무엇을 획책하는가	허영민
2026.5.1.	전쟁국가로의 질주는 곧 자멸이다	리학남
2026.5.2.	일본수상의 망발을 규탄	중국외교부 대변인 발언
2026.5.3.	군사적결탁관계의 확대를 노린 음흉한 술책	은정철
2026.5.4.	전쟁국가, 전쟁상인으로의 진화는 옛 《대일본제국》의 수치스러운 비운을 재현할뿐이다	무기명
2026.5.9.	일본이 경외에서 공격형미싸일을 발사한데 대해 규탄	중국외교부 대변인 발언
2026.5.11.	일본의 《신군국주의》 망동을 저지시킬것을 주장	중국외교부 대변인 발언
2026.5.15.	일본의 《신군국주의》 망동 규탄	중국외교부 대변인 발언
2026.5.23.	군국화를 추구하는 일본에는 미래가 없다	리경수

일시	제목	비고
2026.5.25.	일본에 대한 미국의 중거리미사일배치책동을 비난	중국외교부 대변인 발언
2026.5.29.	일본의 재군사화책동 규탄배격	중국외교부 대변인 발언
2026.6.1.	일본의 군국주의책동을 단죄	중국국방부 대변인 발언
2026.6.2.	일본의 재군사화책동을 강력히 규탄배격	중국외교부 대변인 발언
2026.6.4.	일본의 무기수출확대늘음은 전쟁상인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위험천만한 행태이다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김려원
2026.6.5.	일본의 전쟁준비책동을 단죄	중국외교부 대변인 발언
	내외의 조소와 비난을 받는 대미굴종, 군비증강행위	김수진
2026.6.16.	선제공격력의 강화를 노린 무모한 불장난	은정철
2026.6.19.	일본의 재군사화책동을 규탄	중국국방부 대변인 발언

〈참고 자료 2〉 이재명-다카이치 정상회담에서의 한일 관계/북한 문제 발언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1차	2025.10.30. (한국, 경주)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재임 중 한일 국민이 행복해지길 희망,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차	2025.11.23.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총리가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한일 관계, 한미일 연계가 한층 중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일, 한미일의 긴밀한 연계와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 언급(외무성) 입장 차가 있는 현안들을 정상들의 리더십으로 관리, 국교 정상화 이후 축적된 한일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의 안정적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일치(총리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
		국교 정상화 이후 축적된 한일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의 안정적 관계로 발전시켜 갈 것과 현재의 엄중한 전략 환경하에서 지역·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한일이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 확인(외무성)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3차	2026.1.13. (일본, 나라)	문명사적 전환기에 한일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대통령), 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 한중일의 소통과 협력 필요(대통령),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 재확인(대통령)과 대북정책에서의 긴밀한 공조 이어가리	양국을 둘러싼 엄중한 전략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총리), 대통령과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인식 공유하고 지역 안정을 위해 한일이 연계하여 역할 수행 확인, 한일 및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연계의 중요성 인식(총리?), 이에 관해 논의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의사소통, 지역 정세에 관해 논의, 그 위에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한일 간의 긴밀한 연계 확인, 핵과 미사일 포함한 북한에의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하여 대응해 갈 것을 다시 확인,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
4차	2026.5.19. (한국, 안동)	서툰 외교를 통해 축적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허심탄회하게 논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차관급으로 격상한 첫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평가, 한중일의 협력과 공동 이익 모색 중요 강조(대통령),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 구축 정부 입장 설명(대통령)	대통령과의 우정과 신뢰 관계가 강해지고 심화, 한일 관계와 중동 정세 등 인도태평양 정세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추진을 위해 미일동맹·한미동맹, 그리고 그 전략적 연계에 의한 역지력·대처력의 유지·강화를 포함해 한일이 주체적으로 대처해가는 것이 중요하며 대통령과 이런 인식 공유, 한일·한미일의 안보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연계의 중요성에 일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에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 한일·한미일이 연계하여 대응해 갈 것을 재확인(외무성 발표에는 양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하여 대응 재확인 언급),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

〈참고 자료 3〉 하반기 일본 관련 주요 정치 외교 일정

7월	17일 특별국회 회기 종료 7월 중 국가정보국 창설(예정) 7일 NATO 정상회의 및 국방장관 회의(튀르키예, 8일까지, IP4 국방장관 참석)
8월	8월 중 일본 정부 ‘일본성장전략’ 종합 예정(AI·반도체, 양자, 조선 등 17개 전략 분야에 2040년도까지 민관 370조 엔 규모의 투자) 하순 각 성청 2027년도 예산 요구서를 재무성에 제출
9월	하순 유엔총회(일반 토론 연설)
10월	상순 노벨상 발표 21일 다카이치 내각 출범 1년
11월	11월 중 방재청 발족 3일 미국 중간선거 18일 APEC 정상회의(중국, 19일까지)
12월	12월 중 안보 3문서 개정 14일 G20 정상회의(미국, 15일까지) 하순 2027년도 예산 각의 결정(예정)

2세션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현실적 과제 (주변 4강 외교) : 한반도 평화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주변국과 협력방안 모색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현실적 과제:

한반도 평화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주변국과 협력방안 모색

조용근

경남대학교 교수

1. 現 상황 평가 : 북한의 MDL 국경선화 관련

- (1)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작년 9월에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공표
 - 이후 북한군은 후속 조치로서 △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및 지뢰 매설 △ 비무장지대 GP 추가 설치, △ MDL 국경선화 구축 등 적극 시행
 -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제9차 당대회에서 빠른 기간내 국경선에 대해 △요새화 △경계태세 보강 △화력태세 보강 △ 600·240밀리 방사포, 미사일 배치를 지시하며 전방 4개 군단장 중 3개 군단장을 새로 교체
 - 북한군은 작년까지 MDL 길이의 약 74%까지 국경선화 공사를 완료, 합참은 올해 4월 북한군의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 재개 확인 ⇨ 올해 내 완성 예상
- (2) DMZ 내 한국군·북한군·유엔사가 인식하는 MDL이 서로 상이하며 동부 산악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 거리 차이 발생 ⇨ 작년 11월, 국방부는 MDL 기준선 논의를 위해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무반응 일관
 - 작년 한 해, 남북의 MDL이 상이하여 북한군은 국경선화 공사 간 우리 軍의 MDL을 17회 침범 ⇨ 우리 軍은 경고 방송·경고사격으로 대응
 - 합참의장은 올해 초 전방부대 방문 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MDL 침범 등 도발 가능성이 점증 될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응” 지시
 - 우리 軍이 군사적으로 실제 대응할 경우 △ 북한 신임 군단장들의 김정은 지시 절대수명 △ 600밀리 방사포 배치에 따른 화력태세 강화 △ 이란 전쟁으로 미군의 적극개입 제한 오판 등으로 접경지역 무력충돌 가능성 증대

- (3) 특히 올해 북한은 ICBM 시험 사격 없이, 핵 위협과 더불어 특수목적탄 (집속탄·EMP 탄 등) 시험 및 단거리 미사일 사격 등 대남 겨냥 시험에 국한하여 진행
- 올해 3월 김정은 위원장은 방사포 훈련 참관 후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전술핵무기의 파괴적 위력상에 대해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 언급
 - 윤석열 정부는 DMZ 내에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규정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함에 따라 DMZ 내 제도적 장치도 부재
 - 통신선 단절 下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제1 적대국 선언 △방사포 배치 등 북한군의 자신감 상승은 과거 ‘도발 → 협상 → 긴장 완화’의 패턴을 벗어나 접경지역 무력충돌이 국지적인 교전으로 확전될 가능성 농후
 - MDL 국경선화 완료 이후, 남북 MDL이 상이한 지역에서 북한군의 MDL 침범과 우리 軍의 대응은 구조적으로 불가피 ⇨ 북한 핵무기 사용 위협 下 무력충돌 가능성

- ※ 남북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더욱 고착화, 남북관계는 현 정부 내내 최악의 대립 국면으로 사실상 파탄 우려
- 그러나, 북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내외적 경제적·외교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사적 충돌보다는 일정 수준 남북간 긴장 관리 필요
 - 북한은 MDL 국경선화 공공간 △북한의 국경선 설치에 대한 유엔사 사전 통지 △우리 군 경고사격에 대한 일체 무대응, △김여정의 잦은 대남 담화 등을 통한 북한의 입장 전달 등 시행
 - 우리 군이 북한군의 ‘국경선’ 설치·경계 강화를 군사적 도발로만 간주하여 강력히 대응할 경우, 오히려 의도치 않은 대규모 무력충돌로 확전 가능성 우려 (‘안정-불안정 패러독스’)

2. (對北) 합참 차원의 우발적 충돌방지 대책과 ‘9·19군사합의’ 지상조항 복원

- (1) 정부의 △북한체제 존중 △ 흡수통일 추구 △ 적대행위 추진 등 원칙 고려,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MDL 국경선화에 대한 공식 입장과 대응방안 정립 필요
- 또한 군사 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 유사시 접경지역에서 예상되는 북한군의 핵무기 사용 위협 下 무력도발 등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 병행 강구
- (2) 북한의 MDL 국경선화 완료되는 시기와 연계하여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와 더불어 DMZ 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남측 DMZ를 평화지대로 더욱 공고히 하는 개념의 ‘MDL 평화지대’ 또는 ‘MDL 평화공존 완충지대(가칭)’ 선포

- MDL 인근 평화지대 선포와 함께 남북간 MDL이 모호한 지역에서도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기존의 우리 軍의 경고사격과 군사적 대응조치를 규정한 DMZ 교전규칙 등을 합참 차원에서 재검토 ⇨ 유엔사 협의
 - 이를 통해 북한군의 소위 국경선 경계가 일상적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 軍의 경고사격 기준을 완화하되, 의도적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군사적 대응 실시
 - 필요시 북한군 현재에도 역시 '9·19 군사합의'상 지상완충구역내(MDL ~ 북방 5Km) 연대급 훈련·포사격 중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 '9·19 군사합의' 지상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항 복원하여 대북 메시지 발신
- (3) 향후 북한군이 MDL 나머지 구간에 대한 국경선 구축을 종료하고 국경선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MDL·DMZ를 규정한 정전협정은 사실상 무력화
- 이러한 북한의 MDL 국경선화는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엔사는 무반응으로 일관 ⇨ 국경선 설치 시 북측 DMZ는 소멸
 - 북측 DMZ의 완충지대(buffer zone) 기능이 사라지게 될 경우 정전협정이 국제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사실상 상실
 -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감독·유지 기능은 약화, MDL 이남 남측 DMZ만 유지됨으로써 우리 軍의 정전협정 준수에 대한 정당성도 약화
 - 현재 남북의 MDL 기준점이 상이한 상태에서 북한이 MDL을 자신들의 국경선으로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할 경우, 서해 NLL과 같이 남북의 또 다른 분쟁 소지로 작용할 우려
 -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한에 의한 정전협정 체제의 본질적 현상 변경은 그 대체 체제를 새로 만드는 논의를 필연적으로 촉발
- ※ 북한의 'MDL 국경선화'를 '9·19 군사합의' 복원과 연계한다면 접경지역에서 일정 수준 '평화공존 상태' 효과 ⇨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로 확대
- 정전협정체제 → 9·19 군사합의 복원/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 → 한반도 평화체제/군비통제 체제의 단계적 전환에 대해 적극적 검토 필요
 - 또한,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로서 평화협정 제도화와 군비통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 확보 긴요

3. (對美) MDL 국경선화 단기적 관리를 위해 유엔사 - 북한군간 장성급회담 활용

- (1) 북한이 2023년 4월 일방적으로 남북 통신채널을 모두 차단한 이후에도 판문점 유엔사와 북한군간 전화채널(핑크폰)은 유지 : 1일 1회 통화 시행 중
 - 김정은 위원장은 제9차 당대회 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
 - 북한은 ICBM 시험을 유예한 채, 올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란 전쟁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자제
 - 북한의 개정 헌법에 ‘국익 수호’가 추가되었고, 지난달 북한의 ‘내고향축구단’이 방남하는 등 북한도 국익 고려,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북한도 일정 수준 미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상황에서 국경선 유지를 위한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 호응 가능성
- (2) 북한의 MDL 국경선화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향후 정전협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점을 유엔사에 분명히 인식시켜 유엔사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설득 필요
 - 유엔사 -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은 16회 개최된 전례가 있고, 1998년 유엔사 - 북한군간 합의 당시 회담의제를 ‘정전협정’으로 한정한 만큼, 회담의제에도 부합
 - * 정전문제에 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의 장군급 대화를 위한 절차 4항, “한반도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거인 정전협정을 의제로 한다.”
 - 정전협정 유지·관리의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음을 명확히 주지시켜, 유엔사에서 북한의 MDL 국경선화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 개최를 공개적으로 대북 제안하도록 설득
 -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 개최시 회담 대표로 한국군 장성도 참여하는 만큼,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
 - 북한이 남한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아닌 유엔사가 전면에 나설 경우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Timing)임을 부각
- (3) 유엔사 - 북한군 장성급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의 MDL 국경선화에 대한 본질적 입장 변화는 불가 예상 ⇒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대책 중점 협의
 - 남북간 무력충돌 방지 제도화 이전까지 MDL 경계작전간 발생 가능한 오인 사격, 드론·항공기의 영공 침범, 혹은 국지적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적 안전장치에 대해 유엔사 - 북한군간 중점 협의

- 북한의 전략적 기조 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호 군사 활동의 사전 통보 및 완충구역(Buffer Zone) 설정’ 등 시급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

4. (對中·러) 중국과 러시아 등 對北 우회 접근을 위한 ‘新북방정책’ 추진

- (1)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 ‘제1 적대국’으로 공식 표명하고 북·중·러 밀착을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 개최는 상당 기간 불가
 - 탈냉전기 소련·중국 등 공산권 수교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을 이루었던 과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Nordpolitik)’을 현대적 신냉전 구도에 맞게 재해석한 ‘新북방정책’의 정립 및 추진
- (2) 과거 북방정책이 북한의 우방국을 포섭하여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안이었다면, ‘新북방정책’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상황을 반영, 중국·러시아에 대한 외교·경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 남한과 대화·협력하도록 유도
 - 이를 위해 북한을 통과하여 서울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그리고 서울~베이징 고속철도와 같은 북한에도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실질적인 경제협력 구상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마련
 - 특히, 러시아는 4년이 넘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4% 미만에서 머무르고, 재정이 고갈되며 적자가 발생하는 등 전시 경제 한계에 직면
 - 러·우 전쟁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노동력이 전부인 반면,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러시아의 국가 산업 재건과 현대화에 직결되는 비가역적 경제 패키지 제공 가능
- (3) 現 주중한국대사로 노재현 대사 취임 당시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은 “노재현 대사 임명은 아버지의 역사적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
 -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통해 1992년 한중 수교를 이끈 당사자였던 만큼, 노재현 대사는 중국 정부에 ‘新북방정책’을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지닌 인사
 -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북핵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더욱 강화, 그러나 중국은 책임 대국으로서 북핵을 무조건 수용할 수 없는 본질적 고민과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 유지 기조 변화 불가 ⇨ 한중 국방교류협력 강화 필요

- 특히 중국이 북·중·러 협력을 통해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이 성사될 경우, 2030년대 본격 개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적 거점 활용 예상 ⇨ 전략함대 추가 운용시 동해상 해양 안보 구도의 급진적 변화 불가피
 - 한중 국방 당국은 1992년 수교 이후 해·공군 직통전화 설치, 군 고위 인사 교류, 국방전략 대화 등 다양하게 협력해 온 만큼, ‘新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동해·북한 지역과 연계하여 한·중간 다양한 군사적 긴장완화 제도 마련
- (4) 러시아는 러·우 전쟁 장기화로 북한의 포탄, 미사일, 군사 인력 지원은 절실, 그러나 전쟁 이후 복구과정에서는 북한이 지원할 수 없는 ‘경제 현대화’와 ‘국제 공급망 복귀’라는 전혀 다른 과제에 직면 불가피
- 전후(戰後) 한·러 관계의 복원과 경제협력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다각적인 인센티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
 -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산업 고도화에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 기술, 전후 복구 및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 역량,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금융 자본 공급 등이 포함
 - 특히 두만강 하구에서의 북·중·러 3국 접경지 협력에 △광역 두만강개발계획 재활성화 △한국의 해운 역량과 중국·러시아 육로 인프라 결합 등 향후 3국 접경지에서 ‘물류·에너지 독점권’을 중·러가 선점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러·우 전쟁 기간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제조업 생태계(특히 자동차, 가전, 기계 등)가 중국에 실질적으로 종속, 러시아로서는 중국의 경제 종속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외교·경제적 협력을 환영 예상

5. ‘新북방정책’에 기반한 비핵화 3단계 로드맵 중 ‘중단’ 조치 견인

- (1) 국제사회 지지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 3단계 로드맵(중단 → 축소 → 폐기)을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단’보다는 ‘비핵화’ 입장 지속 발표
- 한·EU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한미 NCG 공동보도문에는 ‘북한 비핵화’ 포함 ⇨ 북한의 반발과 중·러의 북핵 묵인·인정 강화 초래
 - 정부 차원에서 비핵화 입장보다는 로드맵의 최우선 목표로서 ‘중단’ 조치 입장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대내외적 메시지 혼선 방지
 - 이를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에도 최우선 목표가 ‘북핵 중단’임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UN 및 서방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지지 확보

- (2)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안보 실무협의’와 한미 NCG 협의체 등에서 ‘중단’ 조치 우선 시행에 대한 한미간 공감대 형성과 미국 측에서 공식적 지지 선언 유도
-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SNS에 북미정상회담 사진 게시 △G7 정상회의에서 남북관계 관심 표명 등 고려, 이란 종전 이후 미국의 새로운 외교적 성과가 북핵 중단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한 막후 중재 노력 필요
 - 우선적으로 9월 24일 개최 예정인 2차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 중 ‘중단 조치’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외교 총력전 전개
 - 필요시 중·러가 북한의 핵을 묵인하는 상황에서 한미일만이라도 비핵화 방안의 ‘중단’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 선언을 이끌어 낼 필요
 - * 작년 9월 23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대북 억제 태세 견지’ 입장만 발표 ⇨ 비핵화 로드맵상 ‘중단 조치’ 지지 내용으로 전환 필요
- (3)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는 ‘新북방정책’과 연계하여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핵 중단 조치’가 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됨을 인식하도록 적극 설득
-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력 고도화가 ‘新북방정책’ 기반의 한·중·러 외교·경제적 협력·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 요인임을 명확히 규정, 대외적으로 역설 필요
 -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공식적 비핵화 표명’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조치와 중·러가 제공 가능한 체제·안보보증(Security Guarantee) 체계를 연계함으로써 중·러의 적극적인 동참과 호응 유도
 - 특히, 중국의 NPT 체제 수호 및 한반도 안정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조치’ 유도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함을 설득하여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영향력 행사를 견인
 - 북한이 ‘핵 중단’ 이행시 북한을 포함하여 경제적 호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물류·에너지 등 한·중·러 다자간 고부가가치 협력 모델을 제시·유인책 마련
 - 한중, 한러 간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 및 민간 싱크탱크(1.5트랙)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북한의 핵프로그램 ‘중단 조치’ 수용을 위한 중·러 차원 공감대 형성
- ※ 현재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동력 상실의 한계를 정부의 일관된 ‘중단’ 조치 메시지 발신
⇨ 한미 공조 ⇨ 新북방정책을 통한 중·러의 ‘중단 조치’ 호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가능한 현실적 마스터플랜’ 마련 필요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현실적 과제

위협감축·신뢰구축: 재래식·핵 위협 감소를 위한 대북 접근법과 주변 4강 외교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

1. 문제제기: 왜 지금 '위협감축·신뢰구축'인가

- 한반도 평화관리의 조건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 과거에는 남북관계, 북미협상, 주변국 공조를 비교적 분리해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세 층위가 동시에 맞물려 있음.
 - (강대국 차원) 미·중 경쟁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관리된 긴장 체제로 이동하고 있음. 미·중은 충돌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을 논의하지만, 대만·기술·공급망·군사안보의 구조적 경쟁은 계속됨. 한반도 문제는 미·중관계의 중심 의제가 아니라 관리 대상 중 하나로 후순위화될 가능성 상존.
 - (남북관계) 남북관계의 성격이 바뀌고 있음. 북한은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국가 간 관계로 재규정하고 있으며, 핵무력의 불가역성을 정치·법규범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음. 이는 과거의 '민족공조→화해→통일' 경로가 더 이상 그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
 - (지역) 북·러 군사협력의 제도화와 중국의 재개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북·러 밀착은 북한의 전략적 후방을 넓혔고,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방치하지 않으면서도 비핵화보다 안정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현 단계의 정책 목표는 단기간 내 완전한 비핵화나 평화체제의 완성이 아니라, 전쟁 가능성의 감소, 우발충돌 방지, 핵위기 안정성 확보, 그리고 외교 재개를 위한 최소 조건의 복원이어야 함.
 - 핵심은 목표와 과정을 분리하는 것임. 비핵화는 최종 목표(end-state)로 유지하되, 위협감축·군비통제·위기관리는 독립적이고 즉각적인 정책 트랙으로 가동해야 함.

- 이 접근은 유화책이 아님. 오히려 힘의 충돌 가능성을 관리하는 현실주의임. 능력(capability)의 제거가 어렵다면 의도(intention), 우발(accident), 오인(misperception)의 관리부터 시작해야 함.

II. 위협의 실체: 핵·재래식·재원의 삼중 구조

1. 핵 위협: 보유 여부가 아니라 운용 가능성의 문제

- 북한 핵문제는 더 이상 “핵을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핵을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음.
- 공개 추정치에는 편차가 있으나, 북한의 핵탄두 수와 핵분열물질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공통된 평가임. 따라서 정책은 핵능력의 완전 제거라는 장기 목표와 함께, 핵능력 증강 속도와 사용 위험을 낮추는 중간단계를 설정해야 함.
- 북한의 전술핵 운용 개념, 단거리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ICBM, 잠수함·위성·무인체계 개발은 핵위협을 전략 수준에서 작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짐. 이는 위기사태가 낮아질 수 있음을 뜻함.

2. 재래식 위협: 우발충돌과 국지도발의 위험

- 한반도의 실제 충돌 가능성은 핵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보다 접경지역 국지도발, 서해 충돌, 군사분계선 인근 오인, 드론·확성기·전단·사이버 등 회색지대 행위에서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특수전 전력, 사이버·GPS 교란 능력은 여전히 한국 안보의 상시적 취약점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북한군의 실전 경험, 드론·전자전·포병 운용 지식의 환류 가능성은 재래식 위협의 질을 높이는 변수임.
- 따라서 재래식 위협감축의 우선 표적은 북한 전력 전체의 감축이 아니라, 군사적 마찰면과 우발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운용적 군비통제여야 함.

3. 자원 위협: 제재·사이버·북러 거래

- 위협은 무기체계만으로 구성되지 않음. 핵·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외화, 에너지, 식량, 기술, 사이버 수익 역시 위협의 일부임.
- 북·러 군사협력은 북한에 전쟁 배당을 제공하고, 제재 감시 체계의 약화는 북한의 회피 공간을 넓힘. 사이버 탈취와 IT 노동자 수익도 핵·미사일 개발 재원으로 연결될 수 있음.
- 따라서 위협감축은 군사적 조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자원 차단·기술 이전 감시·제재 회피 추적을 포함해야 함.

Ⅲ. 개념 정리: 위협감축·군비통제·신뢰구축

- 위협감축(threat reduction)은 상대의 능력과 의도가 결합해 만들어내는 위협의 총량을 낮추는 포괄 개념임. 군축이 능력의 제거라면, 위협감축은 능력 제거가 어려운 조건에서 의도·오인·우발을 관리하는 접근임.
- 군비통제(arms control)는 두 층위로 구분할 수 있음. 운용적 군비통제는 훈련, 기동, 배치, 정찰, 통보 등 군사활동의 운용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고, 구조적 군비통제는 병력·장비·화력의 규모와 배치 자체를 조정하는 것임.
- 신뢰안보구축조치(CSBM)는 통신선, 사전통보, 참관, 검증, 핫라인처럼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치임. 중요한 점은 신뢰가 있어야 신뢰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구축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임.
- 역사적으로도 적대가 존재한다고 군비통제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님. 냉전기 미·소 간 핫라인과 군비통제, 1975년 헬싱키 프로세스, 동서독 기본조약은 이념적 화해 이전에 군사적 투명성과 접촉의 제도화가 가능했음을 보여줌.
- 한반도에서 9·19 군사합의는 이런 의미에서 평화의 장식품이 아니라 위기관리의 장치였음. 그것은 비핵화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비핵화 협상이 지속될 수 있는 군사적 환경을 만드는 합의였음.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논의가 실종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함)

Ⅳ. 대북 접근법 재설계: 비핵화에서 위협감축·군비통제로

1. 목표와 과정의 분리

- 정책의 첫 번째 전환은 “선 비핵화”의 단선 모델에서 벗어나는 것임. 비핵화를 목표로 유지하면서도, 위협감축과 위기관리를 과정으로 독립시켜야 함.
 - 핵 영역에서는 북·미 채널이 불가피하게 중심이 될 수 있으나, 외교적으로 북미 대화 및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관여를 적극 지지해야 할 것임.
 - 재래식 영역에서는 남북 채널이 핵심이어야 함. 접경지역, 서해, DMZ, 공중·해상 정찰, 심리전, 우발충돌 방지 등은 한국이 직접 당사자로서 설계해야 할 의제임.

2. 9·19 군사합의의 복원과 현대화

- 9·19 군사합의는 전면 원상복구가 아니라 효과가 큰 조항부터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방식이 현실적임. 복원의 출발점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통신선·핫라인·우발충돌 방지 절차임.

- 1단계: 위기관리를 위한 군사합의 추진. 남북 군 통신선, 판문점·군사채널, 서해 해상 교신 절차를 복원하고, 우발상황 발생 시 교신 프로토콜을 마련함.
 - 2단계: 운용적 군비통제. 완충구역, 비행금지구역, 일정 규모 이상 훈련·기동 사전통보, 접경지역 확성기·전단·드론 활동 제한을 추진함.
 - 3단계: 구조적 군비통제. 장사정포 후방 조정, GP·감시초소 상호 관리, 전진 배치 전력 조정, 참관·검증 메커니즘을 논의함.
- 핵심 원칙은 가역성, 동시성, 검증임. 먼저 원상복구가 가능한 조치부터 시작하고,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하며,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신뢰를 축적해야 함.

V. 주변 4강 외교: 교량국가론의 실천

- 남북 양자 통로가 막힌 국면에서 주변 4강은 신뢰구축의 우회로이자 보증인임. 한국의 4강 외교 기준은 “누구 편인가”가 아니라 “누가 한반도 위협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가”여야 함.

1. 미국: 확장억제와 위협감축의 동조화

- 미국은 북한이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려는 최종 상대임. 따라서 한국의 대미 외교는 확장억제 강화와 위협감축 외교를 분리하지 말고 결합해야 함.
- 한미연합훈련은 중단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임. 군사 대비태세는 유지하되, 위협감축 국면에서는 훈련 규모·시기·공개 방식·전략자산 전개를 단계적이고 가역적인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2. 중국: 비핵화 해결사가 아니라 불안정 관리자로 활용

-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함. 그러나 북한의 고강도 도발,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접경지역 불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분명함.
- 중국에 요구할 협력의 문턱은 낮아야 함. “비핵화를 해결하라”가 아니라 “핵실험·ICBM·군사충돌을 자제시키라”는 위기관리 의제로 접근해야 함.

3. 러시아: 가장 저평가된 중심 변수

- 러시아는 현재 한반도 평화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변수이지만,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된 변수임. 북러 밀착은 일시적 거래가 아니라 군사·기술·외교 후방을 제공하는 구조적 변수로 보아야 함.

- 한국의 대러 외교 목표는 관계 회복 그 자체가 아니라 대북 첨단 군사기술 이전의 억제임. 방공·전투기, 정찰위성, 재진입체, 잠수함, 미사일 기술 이전은 한반도 군사균형을 직접 흔들 수 있음.
- 러시아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채널을 유지하는 이중 접근이 필요함. 북러 군사협력 감시, 유럽 안보와 한반도 안보의 연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제재·에너지 의제를 활용한 교섭 공간을 검토해야 함.

4. 일본: 필요한 협력, 그러나 진영화는 관리

- 일본은 북한 미사일 위협의 직접 당사자이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해상 불법환적 감시, 사이버 자금 차단 등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임.
- 그러나 한일 협력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자동 진영화로 굳어지면 한반도 위기관리 공간은 오히려 좁아질 수 있음. 한일협력은 유지하되, 진영 자동편입은 피해야 함.

5. 다자: 낮은 문턱의 동북아 위기관리 틀

- 새로운 다자 틀은 비핵화 일괄타결보다 위기관리, 군비통제, 사이버·제재 감시, 인도주의 협력 같은 낮은 문턱의 의제부터 시작해야 함.
- 한국은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 1.5트랙 전문가 채널, 의회외교, 군비통제 실무그룹을 통해 진영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안정의 공급자로 위치해야 함.

VI. 정책 제언: 단계별 실행과제

구분	핵심 과제	세부 조치
단기~1년	우발충돌 방지·위기관리	남북 군 통신선·핫라인 복원, 서해 해상교신 절차 재가동, 접경지역 심리전 관리, 9·19 군사합의 부분 복원 제안
중기 2~3년	운용적 군비통제·4강 동시외교	훈련·기동 사전통보, 완충구역·비행금지구역 복원, 북미 대화 시 한국 참여 보장, 중국의 도발 자제 역할, 러시아 기술이전 억제, 한일 프레임 정렬
장기	구조적 군비통제·다자 레짐	장사정포 후방 조정, 전진 배치 전력 관리, 핵 동결→상한→감축의 단계별 검증, 동북아 위기관리·군비통제 대화 제도화
거버넌스	정책의 항상성 확보	여야 초당적 의회외교, 1.5트랙 전문가 채널, 정권을 넘어서는 이어달리기 외교, 위기관리 법제화 검토

핵심 추진 원칙

- 첫째, 진영외교를 피하고 국익 기반의 균형을 세워야 함. 한반도 위협을 낮추는 실제 기여를 기준으로 외교를 설계해야 함.
- 둘째,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어야 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한미 확장억제 강화, 북한의 핵 불퇴 선언, 협상틀 붕괴가 반복되는 구조를 끊어야 함.
- 셋째, 국내정치의 진폭을 줄여야 함. 정권 교체 때마다 대북정책이 단절되면 북한에는 “기다리면 된다”는 신호를 주고, 주변국에는 한국 전략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음. ‘이어달리기 외교’가 필요함.

Ⅶ. 결론: 평화는 ‘만드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 한반도 평화관리는 비핵화와 통일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적 국가전략이어야 함. 능력의 제거가 당장 어렵다면, 위협의 총량과 사용 가능성, 우발충돌의 위험부터 줄여야 함.
- 현실적 평화관리는 거창한 선언보다 작고 검증 가능한 장치에서 시작함. 통신선 하나, 해상교신 절차 하나, 훈련 사전통보 하나, 접경지역 심리전 중단 하나가 실제 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한국은 중국과는 불안정 방지 이해를 활용하며, 러시아와는 대북 기술이전 억제에 집중하고, 일본과는 필요한 안보협력을 하되 진영화를 관리해야 함.
- 한국 외교는 진영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안정의 공급자가 되어야 함.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힘을 포기하는 데 있지 않고, 힘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음.
- 따라서 이 발제의 결론은 분명함. 비핵화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핵화만을 기다리며 위협을 방치하지도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협감축의 외교, 신뢰구축의 기술, 그리고 정권을 넘어 지속되는 평화관리의 국가 역량임.

2세션 토론

이근욱

서강대학교 교수

- 긴장관리를 강조. 현재 MDL 관련한 제도/지침에서는 한국군의 대응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지금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또한 DMZ 등을 둘러싼 기존 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에 합의되었던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서문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필요.
- 9/19 합의 복원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이것은 한국 국내정치에 오염되어 버렸다. 순수한 기술적 사안이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정치적 사안이 되어 버렸다.
- 더 중요한 사안은 비핵화이다. 현재 시점에서 장기적인 비핵화에 집중하기보다 단기적인 위기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 자체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단기적 위기관리를 위한 조치가 궁극적인 비핵화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보유를 묵인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가능성이 요원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핵 고도화 중단 등의 중간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최종 비핵화 등의 장기목표를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 “이행 가능한 현실적 마스터플랜” 마련이 중요하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하면 서도, 본인은 발표자가 해당 문제에 어떤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단 논리적으로 위협감축과 위기관리가 상충되거나 구분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두 개가 상충된다면, 즉 위협감축을 위한 방법이 위기관리를 약화시키거나 반대로 위기관리를 위한 조치가 위협감축을 저해한다면 문제이다.
- 이것은 협력이론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PD)와 사슴사냥(SH)의 차이이다. PD에서는 배신이 우월전략이며, 따라서 무조건 배신하고 상대방과의 소통은 무의미하다. 이 경우 협력은 집행력 확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SH에서는 조건부 협력이 가능하며, 소통이 핵심이다. 현재 논의에서는 한반도 상황을 SH로 상정한다. 과연 이것을 검증하였는가?
- SH는 CC>DC>DD>CD이며, PD는 DC>CC>DD>CD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또는 북한의 의도가 SH인가 PD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으며, 대화 과정에서 각자는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과장한다. 이것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 MDL 국경선화와 정전협정의 문제

- 북한의 국경선화 조치는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조치에 해당
 - 정전협정 제1조 제1항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설정) / 정전협정 제1조 제6항~제10항 (비무장지대 내 군사활동 제한) / 정전협정 제1조 제13항 (군사력 증강 및 무기 반입 금지) /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 (평화적 해결을 위한 토대)
- 조용근 박사는 북한이 국경선 구축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경계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정전협정이 규정한 MDL과 DMZ는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식 여하가 한반도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국경선을 부정하고 정전협정을 고수하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 유엔사-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 채널을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실효성이 떨어진 MDL과 비무장지대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함.
 - 국경선을 인정하고 정전협정 무력화를 수용한다면, 유엔사 해체, 비무장지대 철거 등 후속조치들이 이어져야 함.
 - 또는 차제에 북미대화 채널을 가동함으로써 조용근 박사가 제안하고 있는 대체 체제를 형성하는 논의의 장을 여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음.
 - 어떤 경우이든 우리 내부에서 조속히 2국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솔직히 말해서, 셋 이상도 아닌 두 당사자 중 일방이 관계 단절이나 재설정을 요구하면 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상 두 국가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함.
-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불필요한 거래 비용과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음.(예를 들어,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유지 비용 등)
- DMZ를 평화지대로 선포하는 것 역시 정전협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함.

□ 북한의 유엔사-북한 간 장성급회담 호응 가능성

- 조용근 박사님은 북한이 국익수호 원칙에 입각한 유연성 발휘 차원에서 유엔사-북한간 장성급회담에 호응할 가능성을 낙관
- 북한이 MDL을 국경선화하고 주변지역을 요새화하는 기본 취지가 차단과 단절이라는 점에서 국경지대에서의 위험관리 및 무력충돌 방지 문제는 한국군과 미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편, 필요시 군사적 위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담에 호응할 가능성은 별무함.

□ 비핵화(폐기) 목표 설정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현실성

- 비핵화 협상 무망론과 헌법위반 강요론을 주장해 온 북한은 비핵화 목표를 가진 어떠한 노력과 시도에도 불응하거나 반발할 것임. 설사 한국의 노력으로 우방국인 중러의 동의를 얻더라도 북한은 이를 개의치 않을 것임
- 북한의 비핵화 궤도 이탈을 방지하고 의제혼선 및 의제전환전술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완전한 비핵화 최종목표 설정은 지금 북한의 반대로 비핵화 로드맵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기능
- 북한은 한국이 말하는 ‘중단’ 조치란 비핵화조치의 한 단계일 뿐이고, 궁극적인 최종조치로 폐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으므로 원치 않는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

에 올라탈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임.

- 결국 중단 조치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얻으려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야 가능함.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축소 또는 제한을 최종목표로 하는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데 북한의 핵보유 인정 문제로 연결됨.
- 북핵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단계, 즉 북핵위협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관리 가능성을 높이는 단계에서 타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음
- 이와 같이,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북한과 북한 밖의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비핵화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어려운 숙제임.
- 또한 북한의 국력이 상승하고 내구력이 증가하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중단’의 기회마저도 놓칠 수 있다는 점과 더 비싼 값으로 무장한 북핵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함.
- 끝으로, 북한을 비핵화 로드맵의 입구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신뢰형성을 위한 선행조치들이 필요할텐데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지? 대북제재 해제는 선행조치로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 비핵화를 위한 투트랙 접근(제재와 협상)의 한계와 제재 해제·완화를 통한 협상 추동

- 대북제재 레짐의 구속력과 실행력 약화
 - 피제재국 북한의 제재 위반 반복과 처벌 영향력의 미약함, 주요 제재행위자들의 제재를 이탈, 제재행위자 간의 균열이 구속력과 실행력 약화의 원인
- 협상 동기의 부재
 - 북한의 완고한 비핵화 불가 입장, 국제사회 내 비핵화 회의론 확산으로 새로운 동기를 찾고 공감대를 이루는 데 한계
- 북한의 국익 최우선 외교원칙을 고려하여 하노이 구상(제재해제·완화와 영변핵시설 폐기 등) 재가동을 추진함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에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동기를 부여

□ 비핵화 단계별 로드맵을 위한 아이디어 : 합의 기반 단계 이행 방식

〈방식〉

- 각 단계의 성과를 평가한 후 다음 단계로의 진입 여부를 합의하는 방식(합의 기반 단계론)
 -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자동화하지 않고, 각 단계 종료 시점에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를 필수 조건으로 설정
 - 기존 로드맵은 미리 정해진 도착지(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정해진 단계를 밟는 '결정론적 방식'
- 최종 상태를 미리 상정하고 단계별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중지(동결)라는 가장 시급한 목표부터 달성한 뒤, 그 기반 위에서 다음 목표(감축)를 협상해 나가는 방식(현상 기반 방식)
 - 전체 목표를 하나로 묶지 않고, 동결, 감축, 폐기 등을 독립된 협상 단위로 분리하여 단계별로 수행
- 협상의 목표를 고정된 완전한 비핵화(CVID)라는 종착점에 두지 않고, 현재의 안보 상황과 협상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목표설정의 유연화)
- 이상적인 최종 목표보다는 현재의 위협 감소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식

〈기대효과〉

- 완전한 비핵화 최종 목표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 완화 및 비핵화 프로세스 진입
 - 북한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폐기'를 약속할 필요가 없어 협상 참여 용이
 - 비핵화라는 복잡하고 거대한 담론에서 '핵 동결/중지'라는 기술적으로 정의 가능한 영역으로 목표를 낮춤으로써 협상장 진입에 용이
- 신뢰 구축과 위협 감소
 - 이전 단계의 성공이 다음 단계의 자동 이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각 단계가 독립된 협상 대상이며, 신뢰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의 이행 불가
 - 당장 비핵화 자체보다는 핵능력의 추가 고도화를 막는 위협 감소를 협상의 핵심 가치로 상정
 -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그 단계에 머무르거나 협상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중지 또는 감축(축소)과 같은 군비제한 효과 기대 가능

개회사 • —————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제8대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원장이며,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2007-2025),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 국장(2016-2020), 통일부 장관실 정책보좌관(2006-2007),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2002-2005)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다수의 연구 성과를 발표해왔다. 대표 저서로는 「북한 핵위협과 한국의 정체성 정치(2006)」(2012), 「미중시대 북한의 국제 정치 읽기와 대응」(2014), 「한국 근대국가 개념 형성사 연구」(2012) 등이 있다.

기조연설 • —————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세션 •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관심 연구분야는 북한의 대외정책,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보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은 “North Korea’s New Leadership and Diplomacy: Legacy and Challenges of the Kim Jong Il Er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2. No. 1 (Spring 2012);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전망》(수원: 경기연구원, 2016);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협상 전략》(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동아시아 안보지형 변화의 쟁점과 과제》(공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북핵과도기 한국의 안보정책 과제와 쟁점》(공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대서양 세력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지전략 구상에 대한 시사점》(공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수정주의 국가 북한》(공저, 서울: 박영사, 2024) 등이 있다.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문제연구실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국제문제연구실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유라시아학회 부회장, (사)유라시아 21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외교부 자체평가위원, 행안부 조직평가위원, 국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정부 정책 자문에 참여했다. 조선대학교에서 공학학사, 정치학 석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St.Petersburg State Univ.)에서 정치이론·방법론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역서로는

『탈공산주의 다민족 국가들의 정체성 정책』(2017, 공역), 『극동의 부상과 러시아의 미래』(2019, 공저), 『푸틴 4기 행정부 고위관료 인선: 사회적 배경과 정치적 함의』(2018, 단독), 『한러 전략적 협력의 쟁점과 과제』(2019, 공저), 『2020년 러시아의 헌법 개정: 정치적 배경과 함의』(2020, 단독), 『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2021, 공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엇갈리는 세계』(2022, 공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경제학과 한반도』(2023, 공저), 『글로벌사우스의 부상과 국제정치 변동』(2025, 공저) 등이 있다.

1세션 • —————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성균관대학교 정외과 명예교수 겸 성균중국연구원 명예원장이다. 현대중국학회 회장(2013)을 역임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정외과 및 성균중국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다(2007-2025).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문 연구분야는 중국정치 외교, 동아시아 국제질서 등이다.



하상응 서강대학교 교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 관심 분야는 미국정치, 선거, 여론, 정치심리다. 미국 뉴욕시립대(Brooklyn College-CUNY) 정치학과 조교수, 예일대학교 박사후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연구로는 “미국 국내 정치와 경제안보 정책 특목 규제의 사례” (공저, 2025), “미국 고립주의의 두 얼굴: 중국과 러시아 위협 인식에 따른 상반된 외교 태도” (공저, 2025), “한국의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대한 고찰” (공저, 2025) 등이 있다.

1세션 • —————



조진구 경남대학교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를 역임하였다. 도쿄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국제정치 전공)를 취득하였으며, 대표 저서로는 『「평화안전법제」와 집단적자위권』

(2026),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공저, 2024), 『기시다 정권의 외교안보정책』(공저, 2024), 『새로운 한일 관계를 향하여 - 한국인이 알아야 할 문제들』(공저, 2022) 등이 있다.

2세션 • —————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이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2011~2017)을 거쳐, 국가정보기관의 북한관련 정보분석국장(2017~2020), 국가안보실의 안보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 안보비서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2020~2022)으로 재직하였고, 인제대학교 초빙교수(2024~2026)

를 지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저서(공저)로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2012),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2012), 『북한국제화 2017』(2013), 『김정은 시대의 정치와 외교: 선군인가 선경인가』(2014) 등이 있다.



조용근 경남대학교 교수

현재 경남대학교 초빙교수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다. 미8군 한측 부사령관(2022), 국방부 대북정책관(2020~2022), 국방부 북한정책과장(2016~2019), 국방부 미국정책과 총괄(2013~

2014)을 역임하였다. 미국 공군공과대학원에서 운영 분석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다수의 남북군사회담에 대표로 참가하였다.

2세션 • —————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 통제비서관과 평화 기획비서관을 거쳐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2018년 4월 판문점과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으며, 공직을 마친 2022년 5월 연세대학교에 복직했다. 2024년에는 영국 바스

대학교에서 글로벌석좌교수를 겸직했다. 현재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비상근석좌펠로우를 겸직 중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다수의 국내외 학술논문과 함께 대표 저서로 《평화의 힘》(2023), 《헌법의 힘, 외교의 길》(2025)이 있으며, 공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집필한 《변방에서 중심으로》(2024)를 비롯해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2023)가 있다.



이근욱 서강대학교 교수

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며, 미래국방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정치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군사안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왈츠 이후」

(2012), 「이라크 전쟁」(2011, 2021), 「쿠바 미사일 위기」(2013), 「아프가니스탄 전쟁」(2021) 등이 있다.

2세션 • —————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前 수석연구위원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1998-2025)과 부원장(2018-2019),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법제분과위원장(20기), 북한연구학회 회장(2022)을 역임하였다. 건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북한 관련 여러 연구 성과가

있다. 대표적인 최근 연구로 「트럼프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대미정책」(2025), 「북중관계 이상기류에 대한 평가와 전망」(2025), 「북한 신냉전구조 활용구상에 대한 평가」(2023) 등이 있다.

 2026 INSS
PEACE FORUM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 및 평화관리 방안 모색